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보육정책 변화와 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에 대한 분석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현 재 은

보육정책 변화와 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에 대한 분석

지도교수 권 혁 주

이 논문을 행정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현 재 은

현재은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임 도 빈 (인)

부 위 원 장 이 석 원 (인)

위 원 김 재 일 (인)

위 원 원 숙 연 (인)

위 원 권 혁 주 (인)

국문초록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아동의 빈곤, 출산율 증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출산과 육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보육정책이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형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복지체제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개인의 규범의 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이를 위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를 일-가정의 양립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권별 보육정책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인 보육예산 및 보육시설의 증가 속에서도 특히 참여정부 시기(2003-2008년)에 근로시간단축, 보육의 공공성 및 질 강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다른 정권에 비해 더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의 시간 배분 선택이 변화했을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각각 다른 정권에 위치한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이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의 변화 간 관련성에 대한 개연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여성과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미취학아동 유

무에 따라 1999년, 2004년, 2009년 평일과 주말에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은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기혼남성에 비해 확연히 적은 평일 유급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젠더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 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실시되었던 참여정부 시기(2004년)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바우처 등 시장원리 도입, 양육수당 등 돌봄 재가족화 움직임이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200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시간 외 근무시간의 경우 성별,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내외의 주말 근무시간이 존재했다.

가구 내 기혼여성과 남편의 돌봄시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가구 내 젠더관계는 이인소득자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취업여성의 남편과 비취업여성의 남편 간 유의미한 돌봄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의 정도는 미취학아동의 돌봄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는 전반적인 돌봄 시간의 증가 경향 속에서 평일의 여가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미취학아동이 있는 취업모가 미취학아동이 없는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급노동시간의 단축이 특정 계층(여성,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 등)에게 집중되었을 때의 부작용(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Fagan, 2001; Gornick and Heron, 2006)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취업모의 평일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평일과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비이용자의 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시간 비율로 보았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평일 돌봄시간 비율이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자기계발시간의 비율은 평일과 주말에 공통적으로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의 주말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에 비해서도 적었으나, 2004년에는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혼여성 및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가구적, 지역적, 정책적 특성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하는 SUR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1은 지난 10년간 지역에 따른 평일 가사노동과 유급노동 시간의 차이가 사라진 반면, 학력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유급노동시간 차이 및 경제수준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돌봄시간 차이는 공통적으로 2004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2-1의 결과는 1999년에는 주말의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2004년에는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참여정부 시기의 적극적인 보육정책과 맥락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2-2의 결과는 모형2-1과 달리 학력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가구 내 젠더관계의 개선은 법률의 영역 밖에 있지만,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책이나 복지체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보육정책은 가구 내 성별분업의 실질적 완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빠의 달’ 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하게 되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가족 내 젠더관계를 전제하는 여성 근로자의 ‘자동육아휴직제’는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가족권리’ 형태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과 시장 내 젠더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근로시간단축 및 융통성있는 유연근무제의 도입, 시간제 정규직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전일제 이외에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한 부모휴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최근 사기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간제 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 및 비취업모의 취업 및 재취업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고학력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 어린이집의 증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용 시간의 유연성 증대, 시설 내 CCTV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취업모에게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자기계발시

간 등 취업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취업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비취업모에 대한 보육정책 상 혜택 및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을 밝힘으로써,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보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돌봄노동의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보육정책, 여성, 경제활동, 시간배분, 돌봄

학번: 2008-30665

<제 목 차 례>

I.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0
II. 이론적 논의	14
제1절 돌봄노동의 특성	14
제2절 시간 연구	18
1. 시간 연구의 필요성	18
2. 여성의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23
3. 여성의 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31
제3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9
1. 보육정책의 발달 배경	39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과정	42
(1) 근무환경	45
(2) 보육환경	51
III. 연구설계	63
제1절 연구자료 및 내용	63
제2절 변수의 설정	67
제3절 분석방법	73
IV.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 분석	77
제1절 기혼여성의 이중부담	77
제2절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	89
1. 전반적인 시간 배분	89
2.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 배분	95

제3절 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2
1. 조사대상 여성의 특성	102
2. SUR 분석 결과	106
V. 결론	126
제1절 연구 요약	12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29
1. 이론적 시사점	129
2. 정책적 시사점	13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7
참고문헌	140
부록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변화과정	150
부록2.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평일,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2009년)	153
부록3.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의 평일,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2004년)	154
부록4.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의 평일,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1999-2004년)	155
Abstract	156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합계출산율 추이	41
〈표 2〉 보육정책 평가기준	44
〈표 3〉 정권별 보육예산 변화	53
〈표 4〉 보육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 수의 변화	54

<표 5> 시기별 보육시설 규모 및 비중 변화	57
<표 6> 시기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및 비중 변화	58
<표 7> 정권별 보육정책 특성 정리	62
<표 8> 조사연도별 총 응답자 및 시간일지 수	64
<표 9> 요일별, 경제활동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시간일지 수	65
<표 10> 조사연도별 보육정책의 특성	69
<표 11> 돌봄시간의 정의에 따른 내용 차이	70
<표 12> 모형별 변수의 구성	73
<표 13>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여성과 남편의 돌봄시간	83
<표 14> 돌봄시간량에 따른 집단별 돌봄시간 및 비중변화	85
<표 15>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돌봄시간	87
<표 16>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	90
<표 17>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	92
<표 18> 기간별 행동 시간 증가율	93
<표 19> 총노동 시간의 변화	94
<표 20>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평일 시간 배분 차이	96
<표 21>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주말 시간 배분 차이	99
<표 22>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103
<표 23>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학력 분포	103
<표 24> 미취학아동 유무별, 경제활동 여부별 거주지역 특성	104
<표 25> 미취학아동 유무별,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가구규모	105
<표 26-1>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8
<표 26-2>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4
<표 27-1>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7
<표 27-2>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8
<표 28-1>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4

<표 28-2>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5
---	-----

<그림 차례>

<그림 1> 사회적 보상이 사적 보상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의 잘 못된 배분	15
<그림 2> 야근을 자원하게 되는 상황	16
<그림 3>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성별 유급노동시간 변화(평일)	79
<그림 4>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성별 유급노동시간 변화(주말)	82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로서의 위치를 12년째 유지하고 있다. 한편, 평균 수명은 증가하여 2026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인구수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동력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25-49세의 핵심근로계층 수는 이미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동력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보다 먼저 경험한 유럽공동체는 2000년에 열린 리스본정상회의에서 이미 ‘더 나은 직업과 사회적 결속의 증진으로 대변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an active and dynamic welfare state)’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Esping-Andersen, 2002). 여기서 ‘능동적 복지국가’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역할을 가지면서도 사람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능동적인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강조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중요한 ‘사회적 투자’로서 우선시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을 지칭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다양한 파급적 효과를 갖는다. 첫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여성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 간 비율편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고용과 소득은 유아기의 학습능력과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킨다. 이는 세대규모의 감소로 발생할 어려움을 상쇄시킬 미래세대의 생산성 향상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긍정적 관계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Ahn and Mira, 2002), 여성의 고용과 소득의 증진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보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형평을 결정하며(OECD, 2006), 보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자녀의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계승효과(inheritance effect)’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Esping-Andersen, 2002). 더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가족 내 젠더 관계 속에서 여성이 과중하게 맡아온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신체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이 능동적인 사회경제적 활동 또는 적극적인 여가의 향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평등(권혁주, 2007)’을 달성하게 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형평을 결정한다(OECD, 2006).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자기 계

1)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책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Esping-Anderson, 2002).

발을 위한 시간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나은 직업을 갖고, 여성의 경력, 연금 및 생애소득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일제로 일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이후에 바로 이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양질의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직장 내 양성평등(gender equity)을 통해 여성의 고용과 소득수준을 높여 여성의 출산을 증진 및 가족의 빈곤, 아동의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Esping-Andersen, 200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보육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된 여성에 대한 시간제 고용이나 (계약에 의한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에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장려는 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젠더화(gendering)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OECD, 2006).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직장 내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녀 간의 형평(gender equity)은 가족 내 여성과 남편의 육아와 가사의 공평한 분담을 의미한다²⁾(OECD, 2006). 가족 내 남녀 간 형평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전자의 원리와는 달리 법률 영역의 밖에 해당되지만,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과중한 돌봄노동, 가사노동으로 인해 경력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청소(cleaning), 돌봄(care), 식당일(catering), 출납업무(cashiering)(; 4C)’와 같은 저임금의 여성화된 영역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OECD, 2006). 즉, 가정 내 남녀 간 형평은 직장 내 양성평등과도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직장 내 양성평등이 가족친화적 정책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결과라면, 가족 내 남녀 간 형평은 국가의 정책이나 복

2) OECD(2006)는 “직업세계에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강제되어야 하는 권리로 구성된”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육아와 가사의 공평한 분담의 의미하는” ‘남녀 간 형평(gender equity)’을 구분한다.

지체제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개인의 규범적 틀에 해당한다 (Crompton, 2001). 가족 내 젠더관계는 정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가족 내 구성원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여성의 주체적인 시간 배분의 선택,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기조나 복지체제에 의해 서서히 변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산업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OECD 국가들의 영유아 돌봄 관련 사업은 국가별로 운영방식이나 대상, 이용비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6세 아동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정부 지원의 규모가 공통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8). 한편 프랑스의 부모휴가제도,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 등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0-2세 영아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장혜경 외, 2006). 이러한 선진국들의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 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이다. 출산 직후에는 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국가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떠맡아 줌으로써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을 통해 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보육정책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도권 편입,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

충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궁극적 효과(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미래 인력의 양성 등)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요과제로서 보육이 중요시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급증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보육 예산의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2년 3월부터 0-2세 아동에 대하여 실시된 전면적 무상보육은 2013년 3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에 대하여 대폭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달라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정책은 무상, 유상 논쟁에 휩쓸려 정책의 진정한 목표를 상실한 느낌이다³⁾. 그러나 정부가 가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가족 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문제의 핵심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이를 이용하는 여성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일-가정 양립지원의 목표에 비추어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내 젠더관계는 여성의 주체적인 시간 배분의 선택에 영향을

3) 최근의 보편적 보육지원정책은 실시 초반부터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3월에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2013년부터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정계획은 비판여론에 다시 수정되어 2013년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 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되었다.

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젠더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의 일-가정 양립가능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나 목표가 어떠한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보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기 보다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성격이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송다영, 2010; 이옥, 2010).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및 출산율 제고, 더불어 아동 발달과 교육에 대해 가져오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이옥, 2010).

유럽에서 200년간 경험해온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를 불과 몇 십년 동안 겪어온 우리나라에서,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능동적 복지국가’ 건설이 필수적이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예방적 정책은 그것이 가져오는 수많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에서 보육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고, 정권별 보육정책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 개인의 돌봄노동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비롯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에 대한 여성의 시간 배분의 선택은 국가의 보육정책 이외에도 많은 것에 영향 받으므로,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변수의 영향 및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전제하더라도, 보육정책 상의 대폭적인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으로 드러나는 생활 방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영될 밖에 없다. 가사노동, 돌봄노동과 같은 비시장적 노동의 가치는 시간 자원에 대한 배분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개인의 생활 방식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자원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돌봄노동,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의 시간 범주에 대한 시간의 배분 방식에 드러나기 때문이다⁴⁾.

한편 여성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지하는 가족친화적·여성친화적인 보육정책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근무환경 개선, 더 나아가 가구 내 돌봄 부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Esping-Andersen, 2002; OECD, 2006).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육정책과 여성의 시간 배분 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시간 사용 연구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조차도 남성보다 훨씬 많은 돌봄과

4)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자원 내에서 배분되는 여성의 돌봄시간은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대한 분석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Bianchi, Wight and Raley, 2005; 윤자영, 2010).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향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서구 국가들에 비해 유교적 가치관에 영향받아온 일본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OECD,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내 여성과 남편의 돌봄 및 가사노동 시간의 배분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구 내 젠더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인 시간 배분의 선택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가족 내 남녀 간 돌봄 및 가사 시간의 차이가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정권별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보육정책의 변화에 개인의 젠더관계에 대한 규범의 틀이 어떻게 적응하여왔는지 관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육서비스의 정권별 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주체적인 시간 배분의 선택은 자녀를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순간에 맡길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노동이 유급노동, 여가 등 인간의 다른 행동과 비교하여 어떠한 구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 연구에 있어서 시간 자료의 활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시간 자료를 통한 돌봄노동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돌봄노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정권별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일-가정 양립가능성에 비추어 각각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근

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등 근무환경 측면과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등 보육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자료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하루 24시간의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배분되는 돌봄시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즉, 어느 하나의 시간 범주에 시간을 할애하면 나머지 시간 범주에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된다(윤자영, 2010). 따라서, 돌봄,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4개의 식에 대한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넷째, 기술적 분석을 통해 1999년, 2004년, 2009년의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돌봄노동시간 및 유급노동시간, 그리고 전반적인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이중부담의 정도 및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유급노동 시간 및 돌봄노동 시간을 성별에 따라, 미취학아동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다. 또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 시간을 모두 포함한 총 노동시간(Bittman, 2004), 미취학아동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을 반영하는 수동적 돌봄(Budig and Folbre, 2004; Bianchi, Wight and Raley, 2005; Folbre et al. 2005;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을 측정함으로써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돌봄 부담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의 네 가지 시간 범주에 대한 전반적인 배분 방식이 1999년, 2004년, 2009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⁵⁾ 어떻게 차이가 나고, 정권별로 어떻게 변

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왔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다섯째, SUR 모형을 통해 돌봄시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에 대한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대한 개인적, 가구적, 지역적, 정책적 특성의 영향력이 보육정책의 목표 및 성격이 변화한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연도별 데이터를 각각 따로 분석하여 유의미성의 유무 및 그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표본의 차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오차항의 분산이 가진 차이에서 오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권별 보육정책의 차이에 대응하여 개인의 선택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가임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일-가족 양립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권별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를 분석한다. 저출산의 쟁점에 있는 가임기 기혼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돌봄 부담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정권의 변화 속

5)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시간 배분의 차이에 관한 분석은 자료가 가진 한계 때문에 1999년과 2004년만 비교하였다.

에서 기혼여성의 돌봄노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9년, 2004년, 2009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3차례 실시된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20-49세 가임기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을 분석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보육의 의미가 제기된 1991년 이후를 보육정책의 발전기로 본다면, 1999년, 2004년, 2009년의 세 차례의 조사기간은 지난 3개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들이 영향 받기 시작하는 정권 초·중반에 위치한 시기이다. 먼저 1999년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보육예산의 삭감 속에서 시작되어 보육서비스의 양적 팽창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김대중정부 시기(1998-2003년), 2004년은 보육 예산의 급속한 증가 및 근로시간단축(2003년), 제1차, 제2차 육아지원정책(2004, 2005)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노무현정부 시기(2003-2008년), 2009년은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이 증가하고 보육바우처 등 시장원리를 보육시장에 도입한 이명박 정부(2008-2013) 시기에 해당한다.

시간에 대한 분석은 한정된 시간 자원의 배분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삶의 방식 내지는 적응 양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차승은, 2008), 정권별 보육정책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 세 차례 시기의 시간조사 속에서 나타난 가임기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은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기혼여성의 생활의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조사시기의 생활 방식은 보육정책 외에도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 사회적 변화 등 수많은 역사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시간 조사 상에서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99년과 2004년, 2009년의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의 변화를 정권별 보육정책의 특성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를 가진

다.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시기마다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권별 보육정책의 차이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단위는 미취학 아동을 둔 가임기 여성(20-49세)이며, 가구 내 남편의 돌봄시간 및 유급노동시간과의 비교를 위해 남편과 함께 시간일지를 분석한 기혼여성의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이는 표본 내에 미혼의 이모, 고모 등 미취학아동의 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포함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가구를 단위로 조사하는 『생활시간조사』의 조사표는 미취학자녀 유무를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가구 내 미취학아동의 부모 외에 조부모나 이모, 고모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한 ‘(가구 내에) 미취학자녀가 있다’고 응답할 여지가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미취학 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돌봄시간을 비롯한 시간 배분의 차이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1999년과 2004년 2개 연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2009년 시간활용조사에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보육서비스 변수와 관련된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적실성의 문제는 1999-2009년까지의 돌봄시간의 패턴이 어떠한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기술적 분석과 SUR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유급노동시간 및 돌봄시간이 가구 내 남편 및 미취학아동을 두지 않은 기혼여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은

기혼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 정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육아휴직기간의 증가 및 법정근로시간의 변화 등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의 시간 선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기혼여성의 돌봄 부담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아이들의 영양과 안전, 위생, 요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장혜경 외, 2005)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돌봄 행위에 소비한 시간뿐 만 아니라, 부차적·간접적으로 소비한 시간⁶⁾을 모두 고려하였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은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구 내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미취학아동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제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돌봄시간을 비롯한 가사, 유급노동, 여가에 대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통해 각각 다른 정권에 위치한 1999년, 2004년, 2009년에 여성의 개인 및 가구 특성, 경제활동 관련 특성 등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도별 데이터를 각각 따로 분석하는 것은 연도별 특성의 효과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나, 표본의 크기 및 특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효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오차항의 분산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1999년, 2004년, 2009년의 데이터를 풀링하여 분석한 SUR 모형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⁷⁾.

6) 예를 들어 식사준비, 설거지 등을 하면서 아이를 살피는 간접적인 돌봄 행위, 잠을 자면서도 아이를 신경써야 하는 수동적인 돌봄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7) 부록2-부록4에 제시된 SUR모형에서 사용한 표본은 미혼,이혼,사별 여성을 포함하여 기혼여성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 외적타당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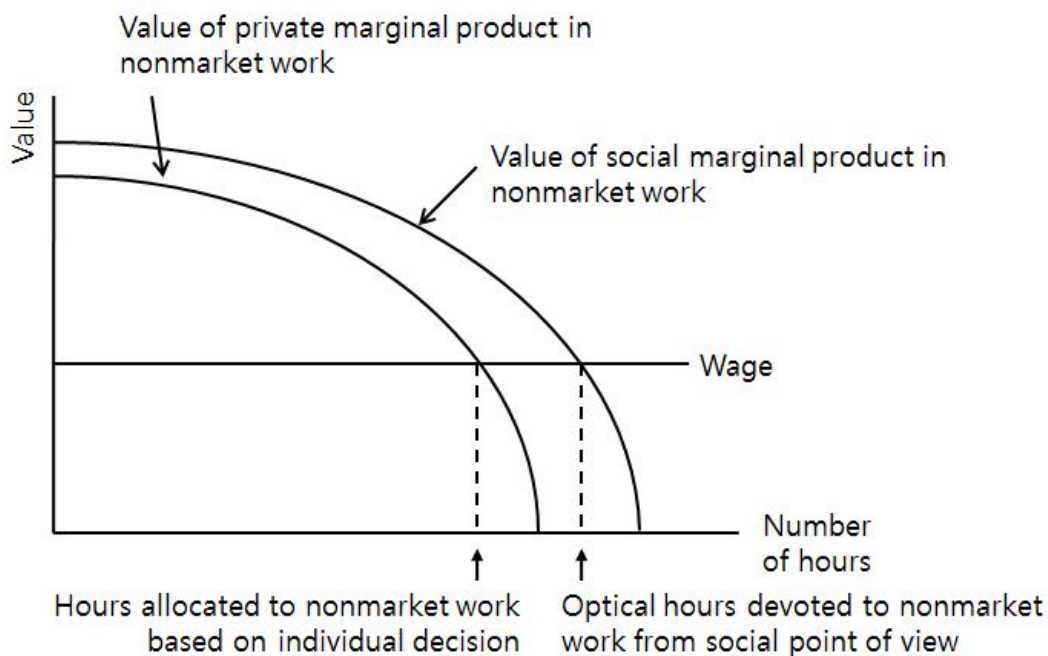
제1절 돌봄노동의 특성

돌봄노동에 관한 관심은 Gary Becker의 1965년 논문 “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으로부터 시작되었다(Folbre, 2004)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Folbre는 Becker의 신고전 경제학에 바탕을 둔 ‘신가정 경제학’에 따른 시간 배분 분석이 가진 한계⁸⁾를 언급하면서 비효율적인 성과로 귀결되기 쉬운 개인의 분권화된 선택에 대한 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Folbre, 2004)을 역설한 바 있다. Folbre는 돌봄노동에 대한 개인의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생에서 만족을 얻는 이타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한다(Folbre, 2004). 이타적 선호는 기대하지 않은 비용이나 혜택을 만들어내기 쉽다(Simon, 1992; Folbre 2004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이타적 선호를 가진 한 개인 A가 장애를 가진 B에게 주는 애정과 돌봄은 B의 친구들 및 제도적 돌봄을 위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Folbre, 2004). 돌봄과

8) Folbre는 신고전경제학의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어진 한계생산곡선 안에서 임금수준에 따라 유급노동과 비시장 행위 간 시간 배분을 선택하게 되는 범위의 한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거나 더 낮은 비시장 생산성을 갖게 되는 역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한다. 둘째, 행위 자체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ex: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돌봄행위) 비시장 행위의 특성, 가족 내 개인의 의사결정이 이타주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 가족 내 시간 배분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ex: 여성의 돌봄시간과 임금 간 관계) 등으로 인하여 예측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셋째, 자발적 교환이 불가능하며, 균형가격이 불분명한 시장 외부에서 일어나는 가족 내 시간 배분에 있어서 비시장 노동의 가치 측정이 어렵다.

관련된 외부성은 승수효과와 연결되기도 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그들 자녀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여 만나게 되는 동료와 시민,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이득이 된다(Folbre, 2004). 이렇게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재화의 경우에, 신고전 경제학자들은 효율적인 계약을 통한 협상을 제안하겠지만(Coase, 1960; Folbre 2004에서 재인용), 아동과 관련된 외부효과는 관련된 모든 집단이 협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며, 자녀에 대한 재산권도 성립될 수 없다.

<그림 1> 사회적 보상이 사적 보상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의 잘못된 배분



*자료: Folbre, N. (2004), p. 16

이처럼,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의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의 편익에 근거하여 유급 노동과 돌봄노동 간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개인은 임금 노동에 대한 시

간을 과다 배분하게 된다(Folbre, 2004, <그림 1> 참조). 이는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돌봄노동과 관련된 분권화된 개인의 최적화된 선택이 모든 개인의 편익을 더 악화시키는 균형에 이르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the Prisoner’s Dillema)’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보수행렬은 돌봄노동이 아닌 유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직장내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2> 야근을 자원하게 되는 상황

		테리	
		야근	퇴근 (돌봄)
로빈	야근	(3, 3)	(3, 2)
	퇴근 (돌봄)	(2, 3)	(5, 5)

*자료: Folbre, Nancy. 2004에서 인용, p. 17

테리와 로빈은 야근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자녀를 돌보게 되면 야근을 할 경우(보수 3)보다 더 큰 보수인 5를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퇴근하고 동료만 야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의 보수만 얻게 되기 때문에 자원해서 야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로펌과 같이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전문직에 잘 적용되는데(Folbre, 2004), 기대되는 만큼의 시간보다 덜 일하는 고연봉의 변호사는 해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Williams, 2000; Folbre, 2004에서 재인용). Folbre는 시간과 돈은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돌봄시간의 부족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으며, 가족과의 행동에 할애될 수 있는 시간을 초과근무에 할애하는 것은 사회적 총편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Folbre, 2004).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부모의 딜레마’가 생기기 쉬운 돌봄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장혜경 외(2008)의 연구 또한 보육서비스는 사적 재화이긴 하지만, 외부성이 존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⁹⁾가 일어나기 쉬운 재화이므로 공공 부문에서 생산·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돌봄노동시간과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배분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살펴본 것으로 가구 및 직장 내 젠더관계, 노동시장의 상황, 돌봄에 대해 부여하는 개인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금 수준에 따라서 유급노동시간을 주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시간의 양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가족 내 젠더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가 공공 부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9) 장혜경 외(2008)의 연구가 돌봄노동(보육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바라보고 ‘시장의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Folbre(2004)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Folbre는 돌봄노동(보육서비스)을 시장 외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분권화된 개인의 선택이 효율적 성과 도달에 실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제2절 시간 연구

1. 시간 연구의 필요성

돌봄노동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제공될 수 없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사노동, 돌봄노동과 같은 비시장적 노동의 가치는 유급노동과 같이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¹⁰⁾. 따라서 비시장 행위의 가치는 시간 자원에 대한 배분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인 예측이 가능하다(현재은·권혁주, 2013).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 자원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을 배분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시간 사용의 범주로 직접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Gershuny, 2000). 따라서 “어떠한 행동에 제한된 시간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분류하는가는 그 사람이 그 행동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를 반영한다”¹¹⁾(현재은·권혁주, 2013)고 볼 수 있다. Smeeding and Marchand(2004)는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여가이며, 시간의 특정한 사용이 대체 비용(대체제의 구매 가격) 또는 기회비용(포기한 행위의 잠재적 수입)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가치 측정 방법들은 시간 배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바

10) Folbre(2004)는 비시장적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시장 외부에서 자발적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균형 가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11) Bittman and Folbre(2004)은 개인의 시간 배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돌봄노동과 같은 비시장 행위에 대한 가치측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증진과 능력 발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있다. 즉, 개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모형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가사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왔다. 시간활용조사는 무엇보다도 예측 및 측정이 어려운 비시장 행위에 대한 보다 근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간활용조사는 하루 24시간 동안의 행동들을 10분 단위로 기록하는 시간일지를 통하여 개인들의 시간 소비 및 배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시간일지를 사용한 시간활용의 측정은 “지난주에 몇 시간동안 아이를 돌보셨습니까?”와 같은 정형화된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큰 신뢰성을 갖는다. 오랜 기간에 걸친 회상을 요구하는 위와 같은 질문은 응답자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진술보다는 조사자가 듣고 싶어할만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경향,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만들어내기 쉽다(Budig and Folbre, 2004). Hofferth(1999)의 연구는 아이들에게 책읽어주기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묻는 정형화된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이 시간일지를 통해 얻어낸 측정치에 비해 두 배나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시간활용조사는 노동 뿐 아니라 여가, 돌봄, 수면과 같은 행위들에 전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행위와 같은 복잡한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한 측정에 보다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특정 행위에 대한 시간 소비의 증가는 다른 행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특정 행위에 소비하는 시간을 배분하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간활용조사

는 기회비용이나 대체비용으로 측정 가능한 비시장 행위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Bianchi(2000)은 취업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받는 돌봄시간은 감소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서, 모의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 및 파트타임 선택의 증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행위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행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돌봄과 관련하여 시간 사용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돌봄노동 외에도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고려하였다(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윤자영,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돌봄노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한 개인의 시간 사용은 다른 사람의 시간 사용과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데, 가족을 단위로 구성원들의 시간 사용을 조사하는 생활시간조사는 이러한 관계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Gershuny(2000)는 '공급 사슬(chain of provision)¹²⁾'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한 사람의 소비와 생산 활동과 관련된 시간 사용이 다른 사람의 시간 사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Budig and Folbre(2004)는 다른 개인들의 존재에 관한 질문 및 행위의 장소에 대한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시간(contact time)'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 또한 2009년부터 '함께한 사람'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주행동 자체를 누구와 함께 하였는지 표기하여 행위의 상호의존성 및 부담의 분담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미취학아동의 존재는 심지어 아

12) Gershuny(2000)는 Ulysses에 나오는 Leopold Bloom의 일상을 예로서 제시하면서, Bloom이 정육점에서 콩팥을 사고, 요리를 하는 시간, 그의 아내 Molly의 식사 시간, 정육점 주인의 노동 시간이 모두 함께 하나의 식사를 만들어낸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비와 생산 활동이 연결되어 Molly의 아침식사를 위한 '공급 사슬'이 된다는 것이다.

동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는 '대기(on call) 시간'을 필요로 한다(Budig and Folbre, 2004). 이렇게 미취학아동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시간의 제약을 측정하기 위해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2007)은 잠자는 시간, 유급노동시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한, 14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을 더하여 보다 완화된 의미의 돌봄시간인 '수동적 돌봄(passive care)' 시간을 측정한 바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2009년부터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함께한 사람¹³⁾'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미취학아동과 함께한 시간'을 모두 더하여 수동적 돌봄시간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시간조사는 주행동(primary activity)과 동시행동(secondary activity)에 소비한 시간을 따로 기입하게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몰입도 내지는 행위의 질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행위와 같이 끊임없는 관심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인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여성이 동시에 미취학아동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고, 저녁식사에 행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는 주행동, 자녀를 돌보는 행위는 동시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행동과 동시행동의 개념은 특정 행위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자유 시간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성 평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Bittman and Wajcman(2004)은 여가시간의 질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주행동으로서의 여가가 다른

13) 2009년 조사자료는 수면 및 자기유지, 유급노동, (학생으로서의) 학습 시간을 제외한 (1)가사노동, (2)돌봄노동(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3)참여 및 봉사활동, (4)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A.혼자 있었던 시간 또는 B.배우자, C.미취학 아동, D.그 외 가족 및 친척과 함께한 시간(주행동 시간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동시행동을 동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가가 순수하게 다른 목적을 가진 동시행동 없이 여가만을 위해 소비되는지, 아니면 다른 유급노동, 무급 노동, 자기 유지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소비되는지에 따라 여가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손문금(2003)은 여가활동이 얼마나 개인의 몰입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가활동의 질이 다를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미혼, 맞벌이 부부, 전통형 부부의 남·녀의 총 동시행동 시간량과 여가시간에 결합된 동시행동 시간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의 측정은 주행동으로만 측정되었을 때 과소평가되기 쉬운 돌봄의 부담 정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1992년 호주의 시간조사 데이터에서는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이 주행동으로서의 돌봄의 세 배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시간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동시행동 돌봄량이 주행동 돌봄량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Zick and Bryant, 1996; Robinson and Godbey, 1997; Budig and Folbre,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차이에서도 비롯되지만, 조사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wording of survey questions)와 돌봄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Budig and Folbre, 2004). 그러나 주행동으로서의 돌봄만을 고려하는 것은 돌봄시간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Ironmonger, 2004). 시간일지를 통해 조사한 주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은 정형화된 질문에 의해 조사된 돌봄시간보다도 적게 나타날 수 있기(Ironmonger, 2004) 때문에,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을 고려함으로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돌봄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더한 돌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는 가치 측정이 어렵고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진 돌봄노동을 간접적으로 예측·측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상충된 요구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여성과 남성이 직면한 '시간의 부족(time squeeze)' 문제와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한 Jacob and Gerson(2004) 또한 일과 가정에 대한 여러 논쟁의 핵심은 시간의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시간 데이터의 장점은 여성의 돌봄 행위의 가치, 돌봄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연구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 비시장 행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자료를 가지고,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시간 배분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면서, 네 가지 시간 범주에 대한 이들의 선택이 정권별로 각각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응하여 변화했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 여성의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방대한 양의 시간 사용 조사 자료를 쌓아온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이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그들의 돌봄시간 및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여성의 돌봄시간에 주목한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시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 돌봄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Nock and Kingston, 1988; Bianchi, 2000; Budig and Folbre, 2004; Guathier et al, 2004; Folbre et al., 2005). 한편, 여성의 돌봄시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분석한 연구들은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

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돌봄시간의 구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Wight and Raley, 2005;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Kimmel and Connelly, 2007; 윤자영, 2010). 이하에서는 먼저 여성의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어 여성의 돌봄시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Kimmel and Connelly(2007)의 연구는 2003 미국 시간활용조사(the 2003 American Time Us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책임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돌봄의 책임이 기혼여성의 시간 선택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력, 나이, 남편의 소득, 인종, 지역, 아이의 수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들 변수가 가사노동, 돌봄, 유급노동 그리고 여가활동 간 시간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의 하루 시간의 전반적인 배분 형태를 연구한 결과, 이들은 돌봄이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대하여 가사노동이나 여가활동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가사 및 여가와 다른 구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돌봄노동은 가사 및 여가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돌봄시간을 다른 무급노동과 분리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단, 이들의 연구와는 달리,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시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돌봄시간이 증가함을 보인 Bianchi, Wight and Raley(2005)와 자녀를 둔 부모의 직장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자녀의 나이 5세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가 남을 발견한 Fagan(2001)의 연구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분석한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2007)의 연구는 가족구조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와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2003년 미국의 시간활

용조사 및 2000년 영국 시간활용연구 자료를 통해, 기혼, 동거, 미혼의 세 가지 가족 구조가 주된 자녀를 돌보는 시간 및 유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들의 연구는 가구의 형태가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이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가구 내 시부모, 부모의 존재가 여성의 돌봄시간을 포함한 전반적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세대구성(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다만 가구 내 구성원들의 시간 배분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남편)의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미혼 및 사별, 이혼한 여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의 2000년의 부모 전국 조사와 2003년 미국인 시간사용조사를 비교 분석한 Bianchi, Wight and Raley(2005)의 연구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받는 주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은 줄어들고,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하여 더 적은 수면시간 및 여가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4시간 내의 주어진 시간 내에서의 시간 자원의 배분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 행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비용이 다른 행위에 대한 포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돌봄시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등 다른 시간 범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고 있다.

한편 국내연구로서 윤자영(2010)의 연구는 보육서비스 가격과 여성의 임금률이 여성의 시장, 가사, 돌봄 여가에 대한 전반적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SU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Kimmel and Connolly(2007)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의 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효과의 정도가 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⁴⁾. 윤자영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들의 시장노동 참여 장애요인이 양질의 돌봄노동 대체재의 부재에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분석을 통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여성의 돌봄시간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은 크게 정의에 따른 여성의 돌봄 부담의 정도에 관심을 갖는 연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참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시간과의 상충관계의 규명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는 아이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먹이기, 재우기, 놀아주기와 같이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만 소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이를 먹이기 위한 음식 준비, 아이 옷 빨래하기와 같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 일에 소비하는 상당한 시간을 수반한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도 아이의 안전을 살펴야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어다니는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거나 물건을 삼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특성은 주행동으로서의 돌봄과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만든다.

돌봄은 포착하기 어려운 결합생산물의 형태, 또는 “멀티태스킹”의 형태

14) 저학력 여성의 경우 높은 임금률은 가사와 돌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유급노동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음(-)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를 갖기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지 않더라도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Budig and Folbre, 2004), 돌봄에 대한 집중도에 따른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 Budig and Folbre(2004)는 돌보는 행위에 대한 우선순위와 개입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돌봄 행위를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 수동적 돌봄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주행동으로서의 돌봄은 먹이기, 옷 입히기, 재우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와 같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한다. Budig and Folbre(2004)는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행동 또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본다. 반면 Bittman et al.(2004)의 연구는 주행동으로서의 돌봄을 상호작용과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기도 하였다¹⁵⁾.

두 번째로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은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과학의 발달은 가사노동이 요구하는 물리적 노력의 강도가 많이 약해지면서 여성이 돌봄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Gershuny, 2000).

마지막으로, 수동적 돌봄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반영한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조합이 아니며, 마음의 상태이다(Budig and Folbre, 2004).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에 안심하며, 언제라도 부모가 자신의 부름에 달려와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

15) Bittman et al.(2004)은 돌봄을 책임어주기, 놀아주기와 같이 지적·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발견적 돌봄(developmental childcare)”, 먹이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등과 같이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돌봄(high-contact childcare)”, 자녀의 등·하원, 학원 수업에 데려다주기와 같은 “상호작용 돌봄(travel and communication)”, 밖에서 노는 아이를 지켜보기와 같은 “관찰적 돌봄(low-intensity childcare)”으로 구분하였다.

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시와 감독을 요구하는 어린 자녀를 신경 써야 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Leslie et al. 1991). 1997년 호주의 시간활용조사에서는 '자녀에게 신경쓰기(Minding Children)'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항목은 “제시된 코드가 설명하는 적극적인 개입 없이 자녀를 돌보는 것, 밖에서 놀고 있거나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감시하거나 관찰하는 것, 자녀를 안전한 환경에 있도록 보호하는 것, 게임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동적 돌봄'을 포함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7). 이러한 수동적 돌봄에 대한 고려는 시간일지 상의 돌봄시간과 정형화된 질문에 의한 돌봄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¹⁶⁾을 설명해줄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아이를 돌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제약¹⁷⁾을 드러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Folbre et al.(2005)은 돌봄시간을 단순한 돌봄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책임 및 제약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수동적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돌봄의 광범위한 의미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연구에서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만을 측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잠자는 시간, 유급노동 시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 14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을 더하여 보다 완화된 의미의 돌봄시간을 측정하였다.

16) 일반적으로 시간일지를 통해 “아이 돌봄” 항목으로 조사된 시간은 아이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 행위에 소비된 시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이를 신경쓰고, 관찰하고, 감시·감독하는 시간을 제외하게 된다(Folbre et al., 2005). 그러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몇시간을 소비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된 시간은 위와 같은 간접적인 돌봄시간을 포함하게 되어 시간일지를 통해 조사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응답하기 쉬워진다.

17) 아이가 잠자는 동안에 부모는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시 회사에 가서 야근을 한다던가, 아이를 두고 외출을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돌봄행위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에 소비한 시간의 총량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게 측정된 각각의 시간량은 돌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돌봄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상에 나타난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 수동적 돌봄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의 돌봄시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과 돌봄시간 간 상충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해왔다(Nock and Kingston, 1988; Bianchi, 2000; Guathier et al, 2004). Nock and Kingston(1988)은 1981년 STU(Study of Time Use)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를 둔 226쌍의 부부의 시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외벌이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부모에 비하여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취업모가 자녀에게 할애하는 돌봄시간이 더 적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돌봄시간의 차이가 자녀에게 집중된 행위(놀아주기, 학습 등)보다는 주변적인 행위(가사 등)에 소비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Bianchi(2000)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유급노동시간과 돌봄시간 간 상충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그녀는 지난 3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해왔다고 주장하였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이유로서, Bianchi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휴직을 하거나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가사 시간을 줄임으로서 돌봄시간을

늘었다. 둘째, 핵가족화, 학령전 교육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필요로 하는 돌봄시간 자체가 줄어들었다. 셋째, 과거에 비해 증가한 남편의 돌봄시간이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돌봄시간 감소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Gauthier et al.(2004)의 연구 또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의 시간이 지난 40여 년간 점점 증가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16개 선진국의 1961-2000년 시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유급노동에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 투자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했다.

위의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여성의 돌봄시간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돌봄시간 간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입장에서 받게 되는 돌봄의 질과 양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자녀에게 할애하는 돌봄시간의 양이 여성이 받게 되는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가족의 상충 문제에서 무엇이 서로 충돌하는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아동발달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을 문제시하게 되고,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일-생활의 양립을 고려한다면 유급노동의 부담, 양육의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Gornick and Heron, 2006).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Gornick and Heron, 2006), 본 연구에서는 정권별 보육정책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의 변화와 더불어 유급노동시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가족 양립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이중부담을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다룬 연구들은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여성의 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먼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내 연구로서, 손문금(2003)과 김진옥(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손문금(2003)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기혼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를 전통형부부로 보고 부인이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와의 두 부부간 여가시간의 소비 행태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가구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성인의 유무, 핵가족인지 대가족인지 여부 등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진옥(2008)의 연구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성별, 가구유형, 성분업에 대한 인식, 미취학아동 유무 등이 총노동시간(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합)과 무급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젠더관계가 무급가사노동 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여성(80분 증가)이 남성(16분 증가)에 비해 무급가사노동시간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간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공통적인 모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의 연구들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

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이중부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영국 등 유럽의 연구들은 여성의 가구 내 돌봄 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주목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크게 (1) 가구 내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근로시간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연구, (2)사회구조 및 가치관, 국가의 복지체제 등 거시적인 환경 요인이 직장 내, 나아가 가구 내 젠더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럽의 근로시간 재조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근로시간정책의 시행에 따른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변화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Fagan, 2001; Gornick and Heron, 2006)은 이러한 정책이 암묵적으로 가구 내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 오히려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Figart and Mutari(1998)의 연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3개국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젠더화하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기여하는 정책들을 채택해왔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파트타임과 초과 근무 등 직업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를 증가시키고 남성의 초과근무를 증가시킴으로서 가구 내 성별 분업 및 노동시장 내 성별 분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ubery, Smith, and Fagan(1998)의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벨기에,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2개국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을 연령대에 따라, 근무형태(풀타임/파트타임)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근무시간에 대한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의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젠더 요인이나

젠더 분업에 대한 인식과 결합함으로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 및 시간 외 근무(unsocial hours working) 증가 등 젠더나 계층에 의한 차별을 증가시키고 결과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¹⁸⁾.

이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지만, Gornick and Heron(2006)의 연구는 보다 연구 범위를 넓혀 8개 유럽 국가 외에 일본과 미국의 근무 시간 정책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분석 대상 국가들이 가진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1)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감소시키는 정책 (2)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유급일수 및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정책 (3)자발적 파트타임 근무의 이용가능성 및 질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비교하였다. 근로시간 정책이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편차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비표준적인 시간의 근무스케줄 증가, 성별 평등에 부정적 영향 등)을 경고하였다.

여러 국가들의 근무시간정책을 비교분석한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Fagan(2001)의 연구는 풀타임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 일하고 파트타임은 아주 적은 시간 일하는 영국의 특수한 근무시간 체제 및 가구 내 성별 분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하여 보다 근무시간 정책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영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직업의 종류(질) 및 근무 형태(파트타임, 풀타임), 가정환경(미취학 아동 유무)에

18) 한편, 이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여성 취업률과 파트타임 근무 비율을 비교한 결과,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파트타임 근무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를 둔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장려되고 있지만, Italy, Spain, Greece와 같은 국가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를 둔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 비율이 낮으면 서도(7.0-14.0%), 높은 취업률(43.0-70.0%)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른 직업헌신의 정도와 근무시간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를 불문하고 풀타임일수록, 직업의 질이 높을수록(전문직), 직업 헌신의 정도가 높았다. 한편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 헌신의 정도가 낮아지고 아동의 나이가 많아지면 공통적으로 직업 헌신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타나났지만,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스케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원인으로는 아이 및 노인 돌봄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은 특히 파트타임 여성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 중 하나는 노동시간 선호에 대한 성별 간 유사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지만, 연구결과는 가구 내 성별 분업으로 인한 노동시간 선호 정도의 성별 차이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분석하면서도, 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 및 가치관, 국가의 복지체제 등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Sirianni and Negrey, 2000; Crompton, 2001; Apps and Rees, 2005; Won, 2012). 먼저 Sirianni and Negrey(2000)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이 부분적으로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대한 사회적 구조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로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을 소비하고, 시장노동은 저평가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모형 및 비경력적 선임-민감 직업 경로(noncareer seniority-sensitive job paths)는 더 적은 가사 책임을 가진 남성에게 유리하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과 가족 내에서 성별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대안적 근무시간 조정 정책으로서 하루 기준으로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스케줄의 선택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인 근무시간 정책의 경향과 중요시되는 문

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Bosch(1999)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방안이다. Bosch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감소되어온 나라들에서 근무 조직이 변화하고 있으며, 더 큰 유연성이 증가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의 유연한 조정은 연도를 기준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보장하며, 하루 또는 주당 최대/최소 근무시간의 명시 하에, 근로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시간조정정책은 앞서 언급된 연구들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장과 가족 내의 성별 평등에 대한 깊은 고려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Crompton(2001)의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에 대응하는 가구 내 취업과 돌봄 간 가능한 결합 유형에 대한 논의(우파, 중도좌파, 페미니스트)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개인의 적응 및 국가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복지체제 특성을 지닌 영국(자유주의, 일-가족 양립에 가장 덜 친화적), 프랑스(조합주의, 일-가족 양립에 중간 친화적), 노르웨이(사회민주주의, 일-가족 양립에 가장 친화적) 세 국가의 은행원과 의사 부부를 전기적으로 인터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고용과 돌봄과 관련된 국가 정책, 고용주 정책, 그리고 개인의 적응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의 능력은 맥락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구성되고 제한받으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국가적 보완, 지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Apps and Rees(2005) 또한 국가의 세금 정책, 보다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공공정책 등 국가의 복지체제적인 특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이러한 요인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성별차이와 생애 주기 편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간사용, 소득, 세금에 대한 자료를 전형적인 가구의 생애 주기 상 주요한 전환을

나타내는 국면(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시기, 자녀 유무, 자녀의 나이) 및 여성과 남성의 나이에 따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남자의 유급노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 여성은 출산·육아의 책임으로 인하여 유급노동이 감소하고, 그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부모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나이의 아동(15세 이하)이 존재하더라도 젊은 여성에 있어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출산 연령 및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체제는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의 존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불리한 세금 정책 및 높은 아이돌봄 비용과 결합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공공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유급노동시간의 특성과 다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체제에 주목한 Won(2012)의 연구는 이인소득자사의 전환 속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긴 노동시간이 시간 배분으로 나타난 직장 및 가족 내 젠더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성별 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사와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간외 근무,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 등 여성의 근로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Won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근무시간이 긴 우리나라의 경우 초과근무는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생애주기에 따른 근무시간의 패턴이 성별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근무시간은 유교적·가부장적 가치관과 맞물려,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증가시키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 및 돌봄 부담 회피에 대한 핑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관계는 단순히 유급노동시간의 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근무환경 및 직업적 지위의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유급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영향 받은 가구 내의 강한 젠더 관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심각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은 근로시간정책, 사회구조 및 가치관, 국가의 복지체제 등 각각 다른 요인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 및 시장 내 젠더관계의 개선을 위한 공통적인 정책 방안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짧은 풀타임 근무 및 파트타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Rubery, Smith and Fagan, 1998; Bosch, 1999; Sirianni and Negrey, 2000; Fagan, 2001; Won,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성별 근무시간의 격차가 줄어드는지, 여성과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수준에서 수렴하는지,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시간 배분에 차이가 줄어드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정권별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보육정책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가능성 간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찾고자 함에 있다. “여성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는 돌봄시간의 양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급노동시간의 양을 결정(Figart and Mutari, 1998)”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돌봄시간 및 유급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시간 배분이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온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일-가정 양립가

능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의 돌봄시간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부담의 정도에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Budig and Folbre, 2004; Bianchi, Wight and Raley, 2005; Folbre et al. 2005;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시간을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을 포함한 돌봄(주행동+동시행동)’, ‘수동적 돌봄(아이와 함께한 시간)’을 모두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되어왔으며,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Rubery, Smith and Fagan, 1998; Sirianni and Negrey, 2000; Crompton, R., 2001; Gornick and Heron, 2006; Won, 2012)에서 유급노동시간이 가구 내 남편과 비교했을 때, 미취학아동이 없는 가구의 기혼여성보다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자원 내에서 배분되는 여성의 돌봄시간은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Bianchi, Wight and Raley, 2005; 윤자영, 2010), 보육정책의 목표 및 방향이 상이했던 정권별 특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조사시기에 따라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SUR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3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발달 배경

과거 영유아 보육이 많은 국가들에서 주요한 문제로서 대두된 이유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있었다면, 이제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돌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여성의 입장에서 보다 평등한 기반에 근거한)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의 양립, 출산율의 증진, 아동빈곤과 교육적 불이익 문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OECD, 2006). 광범위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주된 이슈는 이제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정책적으로 자녀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불과 20여 년 전부터이다¹⁹⁾.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표 1> 참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시행된 정책의 주된 목적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

19)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시작을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만든 탁아프로그램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최미옥, 2012), 대부분의 연구들은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보육정책의 시작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장혜경 외, 2008; 이옥, 2010)

는 보육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²⁰⁾(이옥, 2010), 선진국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궁극적 기대효과(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미래 인력의 양성 등)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뒤 이어 200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보육정책 또한 보육관련 부처의 일원화, 보육시설의 체계화의 준비단계를 거쳐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를 주된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해결방안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보육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적인 국정과제로서 중요시되고,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제고라는 차별화된 정책 목표를 갖게 된 것은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서였다(유희정 외,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이옥, 2010). 2004년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도입, 아동 무차별의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념이 명시되고,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는 등, OECD에서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의 원칙²¹⁾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이옥,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영유아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기 보다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성격이 영향을 받아왔다(송다영, 2010; 이옥, 2010).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및 출산율 제고, 더불어 아동 발달과

20)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이 시설 설립 주체의 제한,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체계적·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자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1) OECD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는 20개국의 두 차례에 걸친 정책 평가를 검토한 결론으로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과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영유아 보호와 발달적 학습의 공공성과 보편성 확대 (2)보육재정의 지속적 확충 (3)아동과 부모의 참여 (4)정부의 서비스 감독권 강화 (5)서비스시설 지원방식의 채택 (6)보육서비스의 시장화 배제(OECD, 2006)

교육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보육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더욱 필요하다(이옥, 2010).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불과 30년이 채 안되는 보육정책의 역사 속에서, 정권에 따라 변화해온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고, 각각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정권별 보육정책의 변화가 1999년, 2004년, 2009년의 3차례에 걸친 『시간활용조사』에 나타난 여성의 돌봄시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표 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5-201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경제활동참가율	40.4	42.8	41.9	47.0	48.4	48.6	50.0	49.2
15-19세	-	34.4	21.1	18.7	14.5	12.4	10.2	8.4
20-29세	-	43.9	45.1	53.5	57.1	58.1	64.1	62.0
30-39세	-	46.7	47.9	53.2	53.3	53.9	54.5	55.1
40-49세	-	57.0	58.7	62.2	63.4	64.1	64.2	65.5
50-59세	-	50.4	50.1	57.5	56.4	53.3	54.2	57.8
60세 이상	-	16.9	19.2	26.4	28.7	30.1	28.1	26.8
합계출산율	2.84	2.14	1.60	1.72	1.51	1.26	1.13	1.16

*자료: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과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보육정책의 목표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니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는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일관된 성격의 보육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Bergqvist and Nyberg, 2002; Borchort, 2002), 호주와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진보적 정부에 의해 추진되던 보육의 공공성이 보수적 정부의 집권에 의해 시장주의적 성격으로 변화한 바 있다(Brennan, 2002; Heinen, 2002; Jensen, 2002; Prentice, 2005). 정책의 목표나 성격이 정권이 가진 성향에 따라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정책의 성과가 2-30년이 지난 후 나타나기 시작하는 보육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Cancian et al, 2002; Esping-Anderson, 2002), 보육정책의 역사가 보다 긴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의 경우에는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옥, 2010). OECD(2006)는 각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들이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정부의 관점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친 OECD 선진국들의 보육정책 검토 결과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중요한 10가지 정책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이옥(2010)은 이 10가지 보육정책의 원칙이 보육비용의 공적 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감독,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등 공공재로서의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 표준적 교육과정의 수립 등 보육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나라 참여정부 하의 보육정책과 MB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정권

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평가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져야 할 주된 목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가족 양립에 있다고 보고,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난 뒤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취업 여성이 충분한 유급의 휴직기간을 제공받게 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시점이 언제인지, 시기 별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가정에 할애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일하는 여성이 미취학 아동을 안심하고 맡기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한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권별로 비교하였다.

이 때, 정부의 보육예산의 크기가 클수록, 보육시설의 수 및 이용 아동수가 많을수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클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또한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이 클수록, 표준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할수록, 아동 1인 당 시설 수 및 교사 수가 적을수록, 시설 및 교사 자격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표 2>는 OECD(2006)와 이옥(2010),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보육정책 평가 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 보육정책 평가기준

	보육정책 평가 기준(핵심적인 정책 영역)
OECD(2006)	(1)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사회통합, 가족복지, 양성평등) (2)아동의 관점에 맞는 학습전략(아동복지, 생애초기발달 강조) (3)ECEC제도의 책무성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수립 (4)표준적인 공식 교육과정 기준 개발 (5)공공재원의 확보 (6)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영유아 프로그램 지원 (7)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장려 (8)ECEC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전문성 개발 (9)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 부여, 재정과 지원 제공 (10)폭넓은 학습과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ECEC 제도의 구축
이옥(2010)	(1)보육의 공공성: 보육비용의 공적 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감독,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등 (2)보육의 보편성: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 표준적 교육과정의 수립 등
본 연구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에 초점 (1)근무환경: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정책, 법정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시행 등 근로조건의 개선 (2)보육환경: 1. 보육서비스 접근성 : 보육예산 규모, 보육비용의 부담 정도, 보육시설 수 2. 보육서비스의 질 : 보육서비스 제공 형태, 표준적인 보육프로그램, 아동 당 시설 수 및 시설기준, 아동 당 교사의 수 및 자격기준 등

(1)근무 환경

OECD(2006)가 제안한 보육정책의 10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육정책이 단순히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가족의 복지,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06).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빈곤 가정의 자녀가 불리한 교육환경에 놓임으로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증가를 통해 미취학아동을 둔 가정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육정책이 현대 가족들이 원하는 실제 욕구(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통한 돌봄시간의 보장, 유급의 육아휴직을 통한 가정 재정의 지원 등)를 반영하는지 여부는 여성의 출산율이나 경제활동참여율 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06). 여성의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등 근로환경에 관한 정책은 보육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성의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의 맥락에서 논의됨이 마땅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정책은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홍정화, 2012).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인력의 증가는 육아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게 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979년 12월 UN의 여성차별협약에 서명하고 1984년 12월 비준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 것 또한 육아휴직정책 도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홍정화, 2012). 당시 도입된 정책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1987년 12월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평등 차원의 정책 내용은 미흡하였으며(홍정화, 2012), 관련 연구들이 최소한 9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이 갖는 여러 장점(모유수유율 증가, 산후우울증 감소, 예방적 건강관리의 이용 등)이 무급휴직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Chatterji and Markowitz, 2005; Tanaka, 2004)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이였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으며²²⁾,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2001년 8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이는 그동안 ‘모성의 보호’ 및 ‘근로여성의 복지 증진(1987년 12월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유)’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의 목표가 ‘실질적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의 평등(2001년 8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구현하는 것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다. 2001년의

22)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월 20만원의 정액 급여를 보장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육아휴직정책은 정책의 목적이 단순한 ‘모성보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급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벌칙 규정이 강화되고, 국가의 사업주 보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는 등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여하였다는 평이다(홍정화, 2012).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의 채용 자체에 대한 기피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문제(홍정화, 2012)가 있다.

이후 2003년-2008년의 참여정부 시기는 2004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 2005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 2006년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마지 플랜’ 등을 통해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중요시되던 시기였다. 특히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으면서,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의 신청요건이 ‘1년 미만의 영아’에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어(2005년 12월 30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함(2005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으로써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액 또한 도입 당시 월 20만원에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2004년 월 40만원, 2007년 월 5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홍정화, 2012). 2008년 시행되었지만 이전 정권인 2007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육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책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바뀐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보육정책은 ‘모성보호’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화한 정책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육아휴직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보완수단(홍정화, 2012)’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에서는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2010년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육아휴직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였다. 그간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선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정률 기준으로 변화하였으며,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급여 중의 일부는 업무복귀 6개월 후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다(홍정화, 2012). 또한 입양가정의 육아부담 완화 및 가족 간 애착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요건에 입양자녀를 포함하였다(2010년 2월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정책의 경우, 도입 이후부터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현실 속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위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과다해서는 안 되며, 보다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나, 실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2011년 연간

2,090시간에 달하여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76시간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Statistics; 대한상공회의소 201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주당 44시간이었으나, 현재의 주당 40시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참여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에 동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 이후에는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장시간의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평가되는 유연근무제의 경우, 시기 별로 다소 변화가 존재한다. 유연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대한상공회의소, 2013)’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1)특정한 날이나 주에 근로시간을 늘린다면 대신 다른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2)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근무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3)주 15시간-35시간 동안 단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4)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제, (5)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재택·원격 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활용이 가능한 유연근무제도로써 (1)탄력적 근로시간제와 (2)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다. 1997년 도입 당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²³⁾가 도입되었는데, 1999년에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2003년까지 제도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1997-2012년 제·개정 「근로기준법」).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9월에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증가하고, 이 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기준이 52시간으로 감소하였다(2003년 9월 개정 「근로기준법」 제50조). 단위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남으로써, 월말에 일이 많고 월초에 일이 적은 경우 외에,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화가 큰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3개월의 단위기간도 여름에 바쁘고 다른 계절에는 한가한 것과 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특정한 분기에만 일이 많은 경우에 활용하기에는 단위기간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대한상공회의소, 2013), 2003년 이후 제도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별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나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근무시간대를 조정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 조직 내부 구성원이나 고객과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대한상공회의소, 2013)”에 적용이 가능하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이용을 통해 낮부터 충분한 시간의 돌봄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

2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 내의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1997년 3월 제정 「근로기준법」).

시 1997년 제도 도입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2011년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비율은 6.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3%에 불과하여, 일본(변형 근로시간제 활용비율 2012년 51.3%), 미국(풀타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 1997년 27.6%, 플렉스 타임제 활용률 2009년 54%) 등에 비해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의 탄력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완화된 것을 제외하면 제도 자체의 개선도, 근로자가 제도를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근무환경의 개선 측면에서의 정권별 보육정책 특성을 정리하자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육아휴직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반면, 근로시간정책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에서의 법정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의 완화 정책 이외에 다른 정권에서의 정책적 변화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보육환경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육아 휴직에 연이어 영유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보육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육시설의 수 및 보육시설 아동의 수가 증가할수록 보

육서비스의 접근성이 크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당 보육시설 수 및 보육교사 수가 어느 정도인지, 표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과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는 2003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는 2008년의 보육예산,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예산의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되는 연도(1998년, 2003년, 2008년)에는 새로운 정권의 공약에 영향 받기 쉽다고 보고, 정권 교체 직전 연도를 함께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대중 정권(1998-2003)은 1997년 11월의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보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8.1% 감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권 말기까지 약 2배 가까이 보육예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5년간의 증가율이라는 점에서 보육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교체되었던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관련 공약이 예산에 반영된 결과, 보육예산이 2002년 대비 42.6% 증가하였다. 이후 참여 정부 기간 동안(2003-2008) 보육예산은 2,999억원에서 1조 434억원으로 3.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 동안 추진된 보육정책 사업들은 차등보육료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권 확대(2004년), 영아보육에 대한 보편적 기본보조금 지원제도 도입(2005년), 평가인증시스템 도입 및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행정 인프라 확충사업 등 OECD가 제안한 정책 영역들을 두루 고려하였다(이옥, 2010)는 평가이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10년만의 보수정권이었지만, 보육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당시 대통령 후보의 보육 관련 공약이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제”였으며,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실시,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이옥, 2010)한 데 기인한다. 매년 증가한 보육예산의 대부분은 사실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의한 것으로, 특히 2011년 12월 국회에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을 결의하면서 보육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고되었다. 1998년 1094억 원에 불과했던 보육예산의 규모는 2012년 3조 285억 원에 달하도록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보육예산의 규모는 4조 1313억에 달한다. 보육예산의 증가 추세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왔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 정권별 보육예산 변화

(단위: 억 원)

정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연도	1998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2년
예산	1,094	2,102	2,999	10,434	14,178	30,285
증감	전년 대비 -18.1%	5년간 1.92배	전년 대비 42.6%	5년간 3.48배	전년 대비 35.9%	5년간 2.14배

* 자료: 해당 연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8년의 경우 여성가족부)

* 예산의 구체적 금액은 1998년 109,480,898천원, 2002년 210,280백만원, 2003년 299,939백만원, 2007년 1,043,474백만원, 2008년 1,417,780백만원, 2012년 3,028,567백만원임.

* 증감율은 (해당연도예산-전년도 예산/전년도 예산)*100로 계산함.

한편, 보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보육료 지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함께 증가하지 않는 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보육시설의 규모 및 이용 아동 수는 단시간 내에 급속히 확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정권의 시작연도와 임기가 끝나는 직전 연도의 보육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함으로써 정권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노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4>는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91년과 김대중 정권이 시작된 2008년, 각 정권이 교체되는 2003년,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말기인 2012년의 보육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보육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 수의 변화 (단위: 개소, 명)

	1991	1998	2003	2008	2012
보육시설 규모	3,690	17,605	24,142	33,499	42,527
각 정권내 증가폭	-	6,537	9,357	9,028	
각 정권내 증가율	-	37.1%	38.7%	26.9%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89,441	556,957	858,345	1,135,502	1,487,361
각 정권내 증가폭	-	301,388	277,157	351,859	
각 정권내 증가율	-	54.1%	32.3%	31.0%	
보육시설 당 아동수	24.2	31.6	35.6	33.9	35.0

* 자료: 해당 연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8년의 경우 여성가족부)

* 정권내 증가폭은 임기말 예산-임기초 예산, 정권내 증가율은 (임기말 예산-임기초 예산)/임기초 예산*100으로 계산함

총 보육시설 규모는 매 정권마다 증가하여 1991년 3,690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 수는 2012년 42,527개소로 11.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권별 증가폭 및 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초기 IMF 체제 하의 금융위기로 인한 보육예산 감소가 있었음에도 5년간 총 6,537개소의 보육시설이 증가하여 37.1%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육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참여 정부에서는 5년간 9,257개소가 증가하여 38.7%가 증가하였다. MB정부는 보육예산에 있어서는 많은 증가가 있었음에도 정책의 대부분이 보육비용 부담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보육시설의 순 증가폭 및 비율에 있어서 이전 정부보다 작게 나타났다(9,028개소 증가, 26.9% 증가율).

한편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한 만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또

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1년 89,441명에 불과하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2012년까지 1,487,361명으로 16.6배 증가하였다. 정권별로 살펴 보면, 보육예산이나 보육시설 증가폭이 가장 작았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 보육시설 아동 수의 증가가 비율상으로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육예산이나 시설 수의 증가가 크게 일어난 데 비해 이용 아동 수의 증가는 절대적·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보육시설 증가폭 및 비율이 이전 정권보다 작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아동 수는 절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수와 이용 아동 수를 따로 살펴보면, 지난 정권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육시설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규모 및 보육시설 수에 대비한 이용 아동 수를 고려하면, 보육예산이나 보육시설의 증가가 반드시 보육시설의 질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용 가능한 아동 수가 다르지만, 각 정권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의 증가폭 및 비율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의 증가폭 및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 4>의 마지막 행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보육시설 수로 나눈 수치를 제시하였다.

단순한 참고를 위해 이 수치를 살펴보다라도, 김대중 정부 초반에 31.6명이던 보육시설 당 아동 수는 정권말인 2008년에 35.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쳐 33.9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명박 정부에 다시 35.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부분의 보육예산이 보육시설 증가 등 보육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기 보다는 보육비용 부담 및 양육비용 지급에 사용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 및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아파트의 가정집을 단순 개조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가정 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책장 및 서랍장, 유아 세면대 및 변기, 대규모의 다양한 놀이공간 등)을 갖추고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질 높은 보육의 제공이 가능하다.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옥, 2010; 송다영, 2010)들은 보육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부담이 30%가 넘는 영국의 사례(OECD, 2007; 김영순, 2006)를 보더라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연간 400개소의 증설을 목표로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5년간 418개소 증설에 그치고 말았다(송다영, 2010).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여 2008년 5%대에 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 또한 2003년 11%에서 2008년에는 10%로 감소하게 되었다(<표 5>, <표 6> 참조). 그러나 이는 단순히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로만 보기는 어렵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3년간 OECD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유도한 이전의 보육정책(보건복지부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2001; 이옥, 2004)의 여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1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14%, 이용 아동 수는 41%에 달했으나, 이러한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보육정책에 의하여 1998

년까지 급감하여 각각 7%, 16%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어 국민의 정부 시기(1998-2003)에도 ‘보육시설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민간보육시설의 인가규정을 보고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영세하고 부실한 민간시설이 난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옥, 2010). 이 시기에도 이미 감소된 국공립어린이집 및 이용자 수 비중은 7%에서 6%, 16%에서 12%로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표 5>, <표 6> 참조).

<표 5> 시기별 보육시설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개소)

	1991	1998	2003	2008	2012
총계	3,690	17,605	24,142	33,499	42,527
	100%	100%	100%	100%	100%
국·공립 어린이집	503	1,258	1,329	1,826	2,203
	14%	7%	6%	5%	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1,927	1,632	1,458	1,444
		11%	7%	4%	3%
법인·단체어린이집	1,237	227	787	969	869
		1%	3%	3%	2%
민간 어린이집		7468	11225	13306	14,440
	34%	42%	46%	40%	34%
가정 어린이집	1,931	6,541	8,933	15,525	22,935
	52%	37%	37%	46%	54%
부모협동 어린이집	-	-	-	65	113
				0%	0%
직장 어린이집	19	184	236	350	523
	1%	1%	1%	1%	1%

*자료: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보건복지부(1991년, 1998년 자료), 200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3년 자료),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08년 자료), 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년 자료)

*참조: 비율은 전체 보육시설은 100%로 하여 직접 계산하였음.

199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보더라도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폐지·휴지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보육비용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모두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일부 완화·조정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6> 시기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및 비중 변화 (단위: 명)

	1991	1998	2003	2008	2011
총계	89,441	556,957	858,345	1,135,502	1,487,361
	100%	100%	100%	100%	100%
국·공립 어린이집	37,017	91,260	103,474	123,405	149,677
	41%	16%	12%	11%	1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141,616	140,994	113,894	113,049
		25%	16%	10%	8%
법인·단체 어린이집	36,099	9,290	37,911	53,818	51,914
		2%	4%	5%	3%
민간 어린이집	40%	250,000	461,640	615,647	768,256
		45%	54%	54%	52%
가정 어린이집	15,613	58,968	103,935	210,438	371,671
	17%	11%	12%	19%	25%
부모협동 어린이집	-	-	-	1,491	2,913
				0%	0%
직장 어린이집	712	5,823	10,391	16,809	29,881
	1%	1%	1%	1%	2%

*자료: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보건복지부(1991년, 1998년 자료), 200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3년 자료),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08년 자료), 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년 자료)

*참조: 비율은 전체 보육시설은 100%로 하여 직접 계산하였음.

한편 참여정부 시기인 이전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팽창 정책으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환원시키고, 보육시설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자격취소규정을 마련하였다(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또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애 대한 국가자격화와 더불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였다(송다영, 2010). 그동안 추진해온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주로 시설을 통한 보육에 한정되어있던 데 반해, “아동연령과 특성(질병 등), 맞벌이 부모의 취업조건 등에 따라(이승미·김선미, 2011)” 다양화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된 것 또한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2006년 시범사업)이었다(이승미·김선미, 2011).

참여정부에 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 차례 더 있었으며(2011년 12월 시행 「영유아보육법」),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을 보급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의 통합·연계를 강조하였다. 2007년부터 시행된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시설중심의 보육정책에서 생기는 사각지대(심야, 주말 돌보미,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돌보미 등)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육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적지 않았으며,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표준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존재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으며, 2009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있어서도 2010년에는 예산 규모 축소(2009년 224억원에서 2010년 153억원²⁴⁾)로 인하여 월 이용시간 제한이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대

24)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22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10년에는 153억원이 책정됐는데, 업무 이관 전 담당부처였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예산을 437억원으로 올렸지만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고 한다. (“아이돌보미 예산, 4대강으로 흘러간다?”, 메디컬투데이 2010-05-12, 여성가족부 나눔게시판 <http://www.mogef.go.kr/korea/view/customer/customer01.jsp?func=view&idx=43562> 8, 2013년 6월 14일 검색)

폭 축소된 바 있다(이승미·김선미, 2011).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육예산의 배분이나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증가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보육비 지원에 있었으며 지원방식 또한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부모에 대한 바우처 지급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효율, 선택,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성향에 근거하여, ‘수요자(부모)의 개인적 선택적 보장’과 ‘시설 간 경쟁유발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보육정책의 목표로 한 데 기인한다(송다영, 2010).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시되어, 2009년 차상위계층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소득분위별 대상자 계층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육 바우처를 통한 시장 기능의 강화, 양육수당의 지급 등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시장화, 계층화, 재가족화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Morel, 2007; 백선희, 2008). 보육바우처를 지원하는 체계에서 국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가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책임’만을 완수하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방식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전, 사후 검증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서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가족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송다영, 2010). 또한 양육수당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이용의 유인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교육경험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기 쉽다(이옥, 2010).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정권별 보육정책들은 보육예산이나 보육시설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표준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보육시설의 접근성이나 질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이 가지는 한계가 아직도 많으며, 특히 최근 정부의 보육 바우처를 통한 국가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약화나 양육수당을 통한 보육의 재가족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증가가 단연 중요한데, 최근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부모는 선택의 여지없이 자녀를 그저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데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호황’은 지난 정권의 보육서비스의 양적 팽창 정책으로 인해 가장 쉽게, 많이 증가한 가정 어린이집의 개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무상보육정책을 통해 그동안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아동의 이용률이 급증하여 굳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이 일찍 하원시킬 수 있는 비취업모의 자녀들만 골라서 입소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명시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이미 증가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면, 현재의 취업모 비친화적인 보육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미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한 보육비용 차별지급이 논의되었다가 비취업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취업모들에게 비취업모와 동일한 보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들에게 일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유연한 보육시간을 제공하는 질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의 최우선은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

(2011)에 따르면, 취업부모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로써 45.8%가 직장 보육시설의 제공을 들어, 보육비 지원(19.1%)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지급(14.0%)을 크게 앞선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신영진, 2011). 취업모의 경제활동참여의 지속, 나아가 비취업모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의 제공이 보육비의 지원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표 7> 정권별 보육정책 특성 정리

구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근 무 환 경	육아휴직	급여	무급→유급	급여액 증가	정액급여→정률
		대상자	‘여성’→‘모든’	‘1년미만’→‘3년미만’	‘3년미만’→‘만6세이하’
		기타	사업자차별규정 및 국가 보조 규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정책 신설	입양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포함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화없음	‘44시간’→‘40시간’	변화없음
		탄력근무	변화없음	단위기간 완화 (‘1개월’→‘3개월’)	변화없음
보 육 환 경	보육 접근성	보육예산	2배	3.5배	2.1배
		보육시설	37%	39%	27%
		보육아동	54%	32%	31%
		시설 외	없음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설	아이돌보미 예산 및 서비스 축소
	보육 질	시설당 아동 수	증가 (31.6→35.6)	감소 (35.6→33.9)	증가 (33.9→35.0)
		시설기준	보육시설신고제	보육시설 인가제	보육시설인가제
		교사기준	자격기준 없음	자격기준 신설	자격기준 강화
		프로그램	없음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자료: 본문(44-61p)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세부 내용에 대한 출처는 본문의 내용 및 <표 3>-<표 6>의 출처를 참조할 것.

Ⅲ.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내용

본 연구는 199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정권별로 변화해온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응해 온 미취학 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정책이 시간 배분으로 나타난 여성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였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3)의 보육정책의 특성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상에 나타난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의 특성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시간활용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계위성계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의 목적으로 1999년 2009년까지 세 차례 조사되었다.

조사항목은 시간 사용에 대한 항목 외에 (1)가구관련사항: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미혼형제 및 자매, 기타), 미취학

아동 유무(2009년 제외), 입주형태(자기집 소유, 전세, 월세, 무상주택), 주거전용 면적 (2)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거주지 (시도 및 농가구분) (3)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당 근로시간(2004년부터 부업/주업 나누어 조사), 직종, 종사상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8> 조사연도별 총 응답자 및 시간일지 수

조사연도	총 유효응답자 수(명)	응답자 작성 총 시간일지 수(일)
1999	42,973	85,906
2004	31,634	63,268
2009	20,263	40,526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개요

하루 24시간 한 행위를 10분 단위로 기입하게 되는 시간일지는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내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작성하며, 이 때 친척방문, 출장,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조사표 배부일부터 회수일까지 5일간 부재 중인 가구원 및 심신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시간일지 작성 이 불가능한 가구원은 제외하였다. 한 사람이 이틀씩 시간일지를 작성하므로, 분석가능한 시간일지의 수는 총 응답자 수의 2배가 된다(<표 8> 참조).

돌봄노동,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에 대한 여성의 전반적인 하루 시간 배분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y, Riber and Stratton, 2007; 윤자영, 2010)은 주중과 주말의 시간 배분이 확연히 달라짐을 고려하여 주말과 주중의 시간 배분을 따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49세 기혼여성이 작성한 시간일지 중 평일에 작성한 것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의 시간일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혼여성 중 취업여성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 반면,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비율은 점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전반적인 시간 배분의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표 9> 요일별, 경제활동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시간일지 수

		1999		2004		2009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요일	평일	8,416	50.52	7,198	60.22	4,165	58.92
	주말	8,244	49.48	4,754	39.78	2,904	41.08
경제활동	취업	8,807	52.86	6,584	55.09	3,927	55.55
	미취업	7,853	47.14	5,368	44.91	3,142	44.45
미취학아동	있음	6,342	38.07	3,976	33.27	2,248	31.8
	없음	10,318	61.93	7,976	66.73	4,821	68.2
합계		16,660		11,952		7,069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량’ 자료²⁵⁾를 SAS 9.1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본 연구에서는 가구 내 기혼여성과 남편의 시간 배분을 비교함으로써,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 의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즉,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병행하게 되는 기혼여성이 받는 부담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돌봄 부담 외에 유급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 등 전반적인 시간의 배분 형태가 남편의 시간 배분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남편의 시간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시간일지는 제외하였으며²⁶⁾, 각

2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10분 단위로 시간대마다 한 행동을 측정한 시간일지를 토대로, 각각의 행동에 대한 총 시간량을 정리한 ‘시간량’ 자료와 24시간동안 10분 단위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한 ‘시간대’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연도별 기혼여성이 작성한 시간일지의 수는 1999년 16,660개, 2004년 11,952개, 2009년 7,069개가 된다(남편이 작성한 시간일지 수도 동일함). 또한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은 부모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취학아동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과의 차이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돌봄 부담의 측정에 있어서는 돌봄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동시행동을 포함한 돌봄, 수동적 돌봄을 모두 측정하였다. 그러나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은 2004년부터, 수동적 돌봄의 개념은 2009년부터 조사되어 모든 연도에 있어서 이를 비교할 수 없다는 자료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보육정책에 대응하여,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이 변화하였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상에서 보육정책과 관련된 변수로서, ‘(유료의)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사용하였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관한 문항은 2009년부터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시간 배분의 차이는 1999년과 2004년의 2개 연도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1999년, 2004년, 2009년의 세 차례의 조사연도는 지난 3개 정권(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각각의 조사연도에 나타난 시간의 배분은 보육정책 외에도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 사회적 변화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시간 조사 상에서는 보

26) 부록에 제시한 1999년, 2004년, 2009년 데이터 전체에 대한 SUR 모형에는 분석함으로서, 기혼여성 외에 미취학아동을 둔 미혼, 사별, 이혼 여성의 시간 배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육정책의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육정책은 경제적 상황이나 정권이 추진하는 다른 정책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 다른 정권에 속해있는 1999년과 2004년, 2009년의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분석의 의미가 있다.

2. 변수의 설정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정권별 성격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응하는 기혼여성의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시간의 배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999년, 2004년, 2009년은 각각 다른 정권에 속해있는 시기로,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정권의 성향이나 주요 정책 목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권별 보육정책이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에 각 조사연도에 추진되었던 보육정책의 특성을 간략히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3년)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보육예산을 비롯한 대폭의 복지예산의 삭감 속에서 시작되어 비록 이후에 보육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였으나 보육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주된 목적이 있어 보육의 질 측면에서 문제(보육시설 신고제로 인한 무분별한 사립 보육시설 증가, 시설 당 아동 수 증가, 보육시설장 및 교사의 자격기준 없음)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기 전인

1997년에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주당 44시간)에 대한 규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5년의 임기 동안 근무시간단축 및 유연근로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 시기는 IMF 경제위기의 극복이 가장 큰 정권의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불가능한 시점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는 1997년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던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에 접어들 무렵²⁷⁾에 시작되었으며, 정권 초기부터 보육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2003년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 및 탄력근무제의 완화(단위기간의 증가 및 최대근로시간의 단축)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보육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을 내세우고, 보육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는 등 보육의 질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이 증가하였고,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체제 수립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27) 정권별 경제상황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1997년에는 IMF 체제하의 금융위기, 2003년에는 신용대란,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해당연도 또는 다음해의 경제성장률의 감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단위: 천억원, 전월동기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총생산	5,063	5,010	5,490	6,032	6,514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33
경제성장률	5.8	-5.7	10.7	8.8	4	7.2	2.8	4.6	4	5.2	5.1	2.3	0.3	6.3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재인용.

*참조: 국내총생산은 백억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존재했다. 그러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보육수당에 대한 바우처 지급 및 양육수당 지급 등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및 돌봄 부담의 재가축화가 우려되는 정책도 공존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10> 조사연도별 보육정책의 특성

조사연도	집권 정부	정권의 특성 및 핵심적 보육정책 내용
1999년	김대중(1998-2003)	금융위기로 인한 복지정책 축소,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법정근로시간 및 유연근로제에 변화 없음
2004년	노무현(2003-2008)	보육예산의 급증, 보육시설의 질적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조, 법정근로시간 단축
2009년	이명박(2008-2013)	보육예산 증가, 보육서비스에 시장원리 도입, 양육수당 등 돌봄 재가축화, 근로시간정책 변화 없음

요약하자면,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은 지속적인 보육예산의 증가 추세 속에서, 양적확충의 시기(김대중 정부), 공공성 강화의 시기(노무현 정부), 시장원리 도입의 시기(이명박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근로시간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은 참여정부 시기의 근로시간단축 및 유연근로제 개선 정책을 제외하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찾기가 어렵다. 즉, 근로환경 및 보육서비스 관점에서 평가한 보육정책만을 고려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 시기(2003-2008년)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각 정권별 보육정책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1999년, 2004년, 2009년의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가 가진 한계 및 통계적 방법론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육정책과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 간 인과관계를 단언할 수 없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시간 배분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간 배분에 대한 기혼여성 개인 및 가구와 관련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영향력의 유무 및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SUR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1> 돌봄시간의 정의에 따른 내용 차이

변수	구분	내용
돌봄시간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돌봄 외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미취학아동 돌봄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었던 시간의 양
	주행동 돌봄+동시행동 돌봄	돌봄 외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미취학아동 돌봄에 더 작은 우선순위를 두었던 시간의 양
	수동적 돌봄	(1)가사노동, (2)돌봄노동(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3) 참여 및 봉사활동, (4)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미취학아동과 함께한 모든 시간의 양

*자료: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개요 및 행동분류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함.

종속변수는 기혼여성의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에 대한 시간 배분이며, 이 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돌봄부담의 정도를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동시행동을 포함한 돌봄(주행동+동시행동), 수동적 돌봄(미취학아동과 함께한 시간)의 개념에 따라 세 가지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시행동 및 수동적 돌봄의 개념은 해마다 하나씩 추가된 개념이기 때문에, 3개 연도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돌봄시간의 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돌봄 시간 외 가사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은 모두

주행동으로서의 시간량만을 고려하였다. 자기계발시간은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을 위해 소비된 시간으로 측정하며,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여성의 취업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분석을 위한 시간일지를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다. 먼저 1999년, 2004년, 2009년의 가구 내에서 시간일지를 작성한 남편이 존재하는 모든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을 분석하는 모형(모형1)에서는 3개 조사연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변수로서, 나이, 학력, 거주지역, 농가여부, 주거전용면적, 주택소유형태, 미취학아동유무, 가족 규모(3세대 가구 여부), 가족 내 성인의 수를 포함하였다. 나이와 학력, 거주지역, 농가여부는 선행연구(Kimmel and Conno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에서 통제변수로서 사용된 변수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그 외 광역시, 광역시 외 지역) 및 농가여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서울·경기·인천 및 그 외 광역시, 비농가(도시)의 경우, 광역시 외 지역 및 농가에 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또한 주택소유형태(자기집, 전세, 월세, 무상주택)와 주거전용면적(평)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용한다. 보육정책에 대한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가족의 빈곤, 아동의 빈곤 감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Esping-Andersen, 2002; OECD, 2006),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시간 배분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보육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전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변수로서 여성 본인 및 남편의 소득을 이용할 수 있으나, 1999년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신 조사연도와 상관없이 수

집된 주택소유형태와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가구관련 변수와 관련하여, 미취학아동의 유무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유의미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윤자영, 2010). 미취학아동의 수를 나이에 따라(2세 간격 또는 3세 간격) 보다 세분화한 연구들도 있으나,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상에는 보육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아동의 나이만을 기입하게 되어있어, 모든 미취학아동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아동의 유무만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시간 배분을 분석한 모형(모형2-1, 모형2-2)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되, 2009년에는 관련 변수가 없으므로 1999년과 2004년의 분석결과만을 비교하였다. 이 때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시간 배분이 크게 달라질 것을 감안하여 취업모(모형2-1)와 비취업모(모형2-2)의 시간 배분을 분류하여 제시하되, 취업모의 모형에 있어서는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주당 근무시간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근무시간의 선택 및 통제가능성을 높여 가사 및 돌봄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Crompton, 2001)가 우리나라에서도 성립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제시된 3개의 모형에 있어서 종속변수인 시간의 배분은 시간일지를 작성한 요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에 평일과 주말의 시간 데이터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법(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Bianchi, Wight and Raley, 2005; 윤자영, 2010), 평일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김진욱, 2008)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연구에서 보다 보편

적으로 연구되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2> 모형별 변수의 구성

모형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구분	변수	내용
공통	개인	나이	만나이
		학력	대졸, 고졸, 중졸, 초졸이하
	경제수준	주택소유형태	자기집, 전세, 월세, 무상주택
		주거전용면적	평
	지역	농가여부	농가/비농가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
	가구	미취학아동	취학 전(만 7세 이하) 아동 유무
		3세대가구	(시)부모 및 조부모 동거 여부
		가구내 10세이상 가구원 수	시간일지 작성한 가구원수
모형1	경제활동관련	경제활동여부	지난 1주일간 수입목적의 활동 여부
모형2-1	경제활동관련	직종	전문직/사무직/서비스/농림어업/ 기능원/단순노무직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사업주/자영자/무급 가족종사자
		주당 근로시간	주업과 부업을 합한 시간
모형 2-1, 2-2	보육정책 관련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유료로 미취학아동을 다른 사람 및 기관에게 맡겼는지 여부

3. 분석방법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시간 배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자원 내에서의 배분 및 선택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전체 시간에 대한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시간에 대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혼 여성의 유급노동과 돌봄, 가사 등 무급노동 간 시간 배분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

유로운 선택에 기초하기 보다는 가구 내 젠더 관계에 영향받기 쉽다 (Fagan, 2001; Sirianni and Negrey, 2000; Won, 2012)는 점에서, 기혼여성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배분을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미취학아동 돌봄에 대한 정의 방법(주행동, 주행동+동시행동, 수동적 돌봄)에 따른 돌봄의 부담 측정과 함께, 여성의 돌봄 부담의 정도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각각 다른 정권에 속하는 1999년, 2004년, 2009년의 기혼여성의 전반적 시간 배분을 미취학아동이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정권별 상이한 목적과 특성을 지닌 보육정책에 대응하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권별 보육정책의 차이가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연도별 데이터에 대한 SUR분석을 실시하였다²⁸⁾. 구체적으로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개인 특성, 지역 특성, 보육서비스 관련 특성 등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을 바탕으로 조사시기별 결정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동일한 응답자의 돌봄, 가사, 시장, 여가 4개의 범주에 소비한 관찰된 시간은 그 사람의 하루 24시간 내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은 다른 행동에 대한 더 적은 시간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활용된 시간 4개의 범주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SUR로 분석하였다.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또는 SURE(seemingly unrelated

28) 그러나 연도별 데이터를 각각 따로 분석하여 유의미성의 유무 및 그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표본의 차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오차항의 분산이 가진 차이에서 오는 유의미성의 유무 및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1999년, 2004년, 2009년의 전체 데이터를 풀링하여 분석한 모형을 부록2에 제시하였다.

regression equations) 모형은 Zellner(1962)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각각 다른 종속변수와 일련의 외생적인 설명변수들을 가진 몇 개의 회귀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회귀 모형을 말한다. 각각의 방정식은 그것 자체로 타당한 선형 회귀 방정식이며 각기 따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seemingly unrelated’라고 일컬어지지만, 어떤 학자들은(Davidson and Mackinnon, 1993) 오차항들이 방정식 간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seemingly related’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t_j^i = \beta_j^i X + \epsilon_j^i \quad , \quad \begin{cases} j = \text{시장, 가사, 돌봄, 여가시간} \\ i = 1999\text{년}, 2004\text{년}, 2009\text{년} \end{cases} \quad (1)$$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위의 식 (1)과 같다. 식 (1)의 j 는 각각 유급노동, 가사노동, 미취학아동 돌봄, 여가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t_j^i 는 i 시기에 미취학 아동을 둔 기혼 여성이 j 활동에 소비하려고 선택한 시간량(분)이 된다. 이 때, 각 행동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선택한 시간량이 0보다 적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관찰되는 시간량은 항상 0의 값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Tobit 모형을 포함한 Correlated Tobit Regression을 사용하기도 한다(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또는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 돌봄 시간이 0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유급노동시간의 경우에도 주업 및 부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집에 가져와서 일함, 그 외 일 관련 활동 등 유급의 노동시간 외에, 무급가족 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그 외 구직활

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비취업모에 있어서도 0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윤자영(2010)의 연구와 같이 Tobit 모형을 고려하지 않은 SUR 모형을 사용하였다.

식 (1)에서 잔차항 ϵ_j 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돌봄, 가사, 시장, 여가에서의 활동에 사용된 시간을 고려하여 표현하면 식 (2)와 같은 형태로 항등식 간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l: 여가, cc: 미취학 아동 돌봄, hp: 가사노동, m: 유급(시장)노동)²⁹⁾.

$$\begin{bmatrix} \epsilon_l \\ \epsilon_{cc} \\ \epsilon_{hp} \\ \epsilon_m \end{bmatrix} \sim N \left[\begin{pmatrix} 0 \\ 0 \\ 0 \\ 0 \end{pmatrix}, \begin{pmatrix} \sigma_L^2 & \rho_{Lcc}\sigma_L\sigma_{cc} & \rho_{Lhp}\sigma_L\sigma_{hp} & \rho_{Lm}\sigma_L\sigma_m \\ \rho_{Lcc}\sigma_L\sigma_{cc} & \sigma_{cc}^2 & \rho_{cchp}\sigma_{cc}\sigma_{hp} & \rho_{ccm}\sigma_{cc}\sigma_m \\ \rho_{Lhp}\sigma_L\sigma_{hp} & \rho_{cchp}\sigma_{cc}\sigma_{hp} & \sigma_{hp}^2 & \rho_{hpm}\sigma_{hp}\sigma_m \\ \rho_{Lm}\sigma_L\sigma_m & \rho_{ccm}\sigma_{cc}\sigma_m & \rho_{hpm}\sigma_{hp}\sigma_m & \sigma_m^2 \end{pmatrix} \right] \quad (2)$$

식 (1)의 X는 기혼여성의 개인 특성(나이, 학력), 경제활동 관련 특성(경제활동참여 여부, 종사상 지위 및 직종, 주당 근로시간), 지역 특성(농가여부, 거주지역), 가구 특성(시부모 및 부모와의 동거여부, 미취학아동 유무, 가구 내 10세 이상 가구원 수)을 포함한다. 특히 가족구조를 외생적 변수로 취급하던 기존 연구(Bryant and Zick, 1996; Sandberg and Hofferth, 2001; Hallberg and Klevmarken, 2003)와는 달리, (시)부모와의 동거여부(3세대 가구)와 같은 가족 구조적 특성이 돌봄 시간의 사용에 인과적, 선택적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2007)의 연구와 같이 주중과 주말에 있어서 시간사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에 대한 더미변수를 사용하기 보다는 취업 기회, 돌봄노동 이용가능성, 학교

29)SUR 모형은 Correlated Tobit Regression을 사용한 Kimmel and Connelly(2007)와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2007)의 연구 모형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특성에 따른 보다 일반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설명변수의 한계적 영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말과 주중의 시간사용 모형을 따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전반적인 시간 배분의 패턴 및 보육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분리한 모형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IV.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 분석

제1절 기혼여성의 이중 부담

정권별로 상이한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해야 하는 일과 가족에 대한 이중 부담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고, 이는 정권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돌봄 부담 및 유급노동 부담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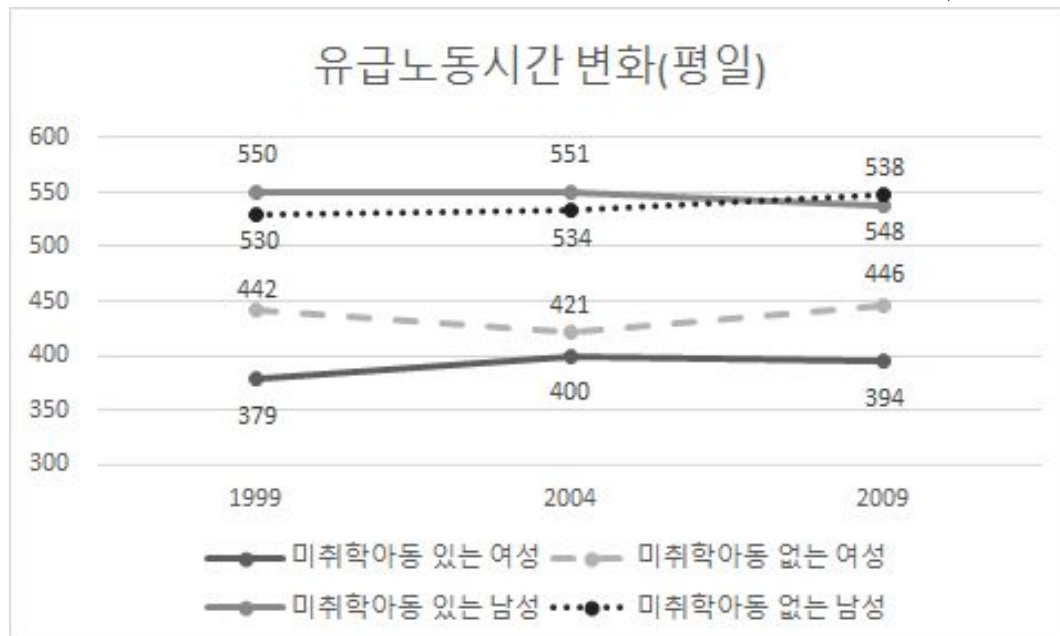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온 유럽의 연구들은 돌봄노동시간과 유급노동시간 간 유

기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이 노동시간에 미친 변화를 분석해왔다 (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Gornick and Heron, 2006). 이들 연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돌봄 부담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역으로도 성립한다고 말한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 유급노동시간은 돌봄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고, 반대로 돌봄시간에 소비하고자 하는 시간의 정도는 유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풀타임, 파트타임)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기혼여성이 유급노동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의 양이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정도 및 변화의 방향이 미취학아동을 두고 있지 않은 기혼여성이나, 기혼의 남성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이들의 돌봄시간의 양을 남편의 돌봄시간과 비교해보고, 돌봄 부담의 정도를 돌봄에 대한 정의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유급노동시간을 선택하게 되는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평일 유급노동시간 변화를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남성,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남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비교해보았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기혼여성은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기혼남성에 비해 확연히 적은 유급노동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 가족 내 책임에 대한 젠더화된 구조가 유급노동시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3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개인

의 유급노동시간의 변화가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성별 유급노동시간 변화(평일, 분/하루)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평일 유급노동시간만을 분석함.

*참조: 연도별 시간일지 수는 미취학아동 있는 여성 (1999년, 2004년, 2009년 순으로) 1231, 937, 514(개); 미취학아동 없는 여성 3306, 3303, 1783(개); 미취학아동 있는 남성 3622, 2316, 1273(개); 미취학아동 없는 남성 5767, 4539, 2707(개)

먼저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경우, 2004년에 유급노동시간이 오히려 증가(379분에서 400분)하였다가 2009년에 감소(394분)한 반면,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유급노동시간이 감소(442분에서 421분)하였다가 증가(446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작아졌다는 사실은 기혼여성이 미취학아동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제약이 그만큼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시기(2003-2008)에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제 이용조건의 완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뿐 만 아니라,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목표로 국가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육의 질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2004년의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 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 감소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상당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다시 사라지고,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 간 유급노동시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많은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적어도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관계가 다시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젠더화 경향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근로시간정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소극적 시행, 양육수당의 지급 등 돌봄의 재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젠더관계의 강화 등에 부분적으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감축된 (2003년) 이후인 2004년에 있어서도 실제 유급노동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남성의 경우, 정책의 시행과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소폭이지만 유급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2004년에서 2009년의 기간 동안 유급노동시간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정책에 대응한 두 집단 간 유급노동시간 소비의 차이가 지난 세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남성의 육아휴직장려 정책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³⁰⁾.

30)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 것은 2001년(김대중 정부 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요건이 ‘1년 미만의 영아’에서 ‘3년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고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은 2005년(노무현 정부 시기), 육아휴직의 요건이 ‘생후 3년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더욱 완화된 것은 2008년(이명박 정부 시기)으로, 1999년과 2009년 사이에는 남성의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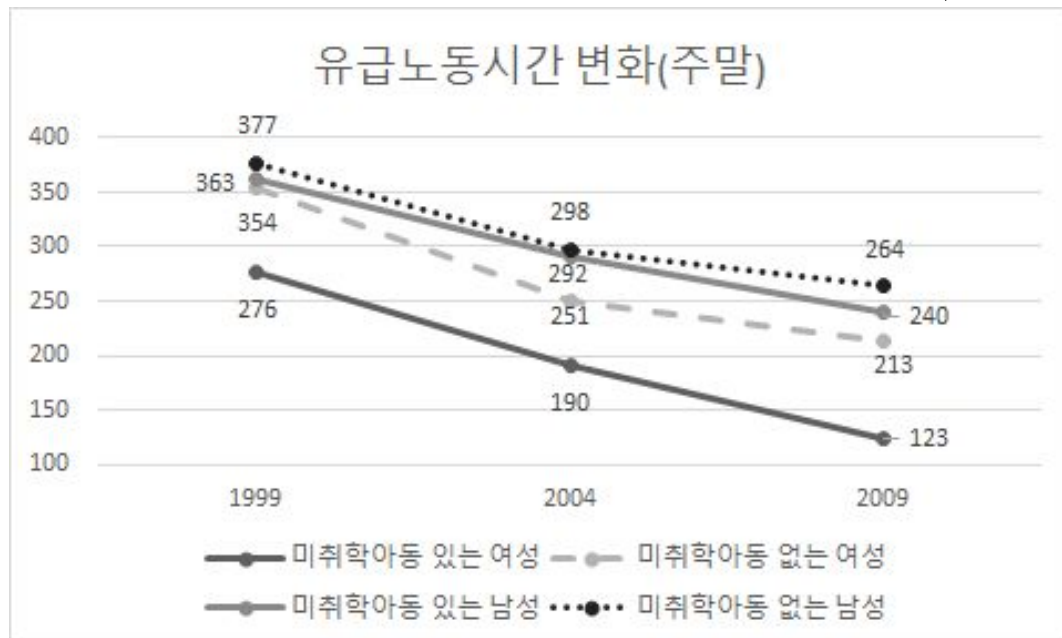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가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Fagan(2001)의 연구는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 헌신의 정도가 낮아지고 아동의 나이가 많아지면 공통적으로 직업 헌신의 정도가 높아지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미취학아동의 유무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여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공적인 근무 시간 정책으로서 성별에 상관없는 짧은 풀타임 근무시간 및 상대적으로 긴 파트타임 시간 등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연한 근무시간정책을 제시하면서(Rubery, Smith and Fagan, 1998; Sirianni and Negrey, 2000; Crompton, R., 2001),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시간 조정정책은 오히려 여성의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를 증가시키고, 여성근로자가 지배적인 분야에 여성을 더 집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Gornick and Heron, 2006)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성별 노동시간을 분석한 위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부작용 중의 하나는 시간외 근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4>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의 변화를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주말 유급노동시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성별에 관계없이, 미취학아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주말 하루 2시간 내지 4시간의 유급

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노동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일-가족의 양립 측면에서 충분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림 4>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성별 유급노동시간 변화(주말, 분/하루)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주말 유급노동시간만을 분석함.

*참조: 연도별 시간일지 수는 미취학아동 있는 여성 (1999년, 2004년, 2009년 순으로) 1193, 605, 348(개); 미취학아동 없는 여성 1077, 2039, 1282(개); 미취학아동 있는 남성 2356, 1522, 896(개); 미취학아동 없는 남성 3700, 2967, 1882(개)

취업모에 있어서 주말은 평일에 충분히 할애하지 못한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주중의 부족한 여가시간(Hyun, Lee and Kum, 2012)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로부터의 부담에서 해방된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매우 긴 편이라는 점에서(Won, 20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혼여성의 시간 외 근무는 더욱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는 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것이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에게서만 보장된다면, 이는 거꾸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기혼여성에게 직장에서의 차별적인 처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성별 및 미취학아동 유무와 상관없이 습관적인 야근 및 주말근무 등 직장 내에서의 근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가구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의 정도를 남편의 돌봄 부담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Crompton(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문제에 대응하는 가구 내 취업과 돌봄 간 가능한 결합 유형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인 (1)남성 부양자/여성 돌봄자형부터, (2)남성부양자/여성 파트타이머, (3)맞벌이 부부/국가 돌봄자 또는 시장 돌봄자, 그리고 가장 비전통적인 형태로서 (4)맞벌이 부부/부부 돌봄자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가구 내 부부의 돌봄 부담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젠더 관계에 대한 규범의 틀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돌봄의 사회적 책임(국가 돌봄자 모형을 지지할 경우)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13>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여성과 남편의 돌봄시간(분/하루)

	1999		2004		2009	
	여성	남편	여성	남편	여성	남편
취업여성(A)	80	21	88	27	109	44
비취업여성(B)	172	25	191	31	207	43
비율(A/B)	0.47	0.84	0.46	0.88	0.53	1.02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여성과 그 여성의 남편에 대한 평일과 주말의 돌봄노동시간을 분석함 (여성과 남편의 시간일지 작성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의 시간소비를 구분하지 않음).

*참조: 취업여성 부부(맞벌이 부부)가 작성한 시간일지 수는 (1999년, 2004년, 2009년 순으로) 2424, 1542, 862(개), 비취업여성 부부(외벌이 또는 소득없는 부부)의 경우 3918, 2434, 1386(개)

<표 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과 남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을 증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에 대한 취업여성의 돌봄시간의 상대적 비율 및 비취업여성의 남편에 대한 취업여성의 남편의 돌봄시간의 상대적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의 정도 및 취업여성 남편의 돌봄 부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먼저 비취업여성에 대한 취업여성의 상대적 비율은 1999년에 비하여 2004년에 매우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자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취업여성의 돌봄시간의 증가 및 비취업모에 대비한 상대적 돌봄시간 비율의 증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책임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여성의 입장에서 이는 가구 내 돌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취업여성의 남편의 돌봄시간 및 비취업여성의 남편에 대한 취업여성 남편의 돌봄시간 비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취업여성의 남편은 2004년까지 비취업여성의 남편보다도 절대적으로 적은 양의 돌봄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그러한 관계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시간량의 차이는 하루 1분에 불과하다. 상대적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취업여성의 남편의 시간은 아내의 돌봄시간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 나타난 분석 결과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부의 돌봄 시간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돌봄노동시간의 편차가 클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표 14>에서는 돌봄시간이 하루 60분 이상인 집단(많은 돌봄)과 60분 미만인 집단(적은 돌봄)을 구분하여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값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제시하였다.

돌봄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먼저 돌봄

을 많이 하는 사람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극도로 높이 나타나 우리나라의 가구 내 젠더 관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 60분 이상의 돌봄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의 비중은 성별에 상관없이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젠더 관계가 지난 10년간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돌봄노동이 많은 남성 집단의 평균 돌봄노동시간은 2004년의 평일과 주말에 공통적으로 감소하였고, 돌봄시간이 많은 집단의 평일 여성과 남성 간 돌봄시간 격차는 더욱 증가하여, 여전히 가구 내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돌봄시간량에 따른 집단별 돌봄시간 및 비중 변화 (% , 분/하루)

구분		평일			주말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여성	많은 돌봄 (비중, %)	72	76	84	66	71	80
	(평균, 분/하루)	189	199	204	187	187	192
	적은 돌봄 (비중, %)	28	24	16	34	29	20
	(평균, 분/하루)	24	28	27	20	28	25
	N	3168	2395	1316	3174	1581	932
남성	많은 돌봄 (비중, %)	13	14	23	20	26	40
	(평균, 분/하루)	106	97	98	122	118	131
	적은 돌봄 (비중, %)	87	86	77	80	74	60
	(평균, 분/하루)	7	10	11	7	11	14
	N	3840	2434	1319	2502	1592	929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부의 돌봄시간량 및 비중을 돌봄시간이 60분 이상인 집단과 60분 미만인 집단으로 나누어 제시함.

이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며, Crompton(2001)의 젠더 관계에 대한 규범의 틀에 의하면 (4)맞벌이 부부/부부 돌봄자의 틀에 근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취업은 보편적이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장려되어야 하는 정책적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젠더 관계에 대한 개인의 규범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틀은 (3) 맞벌이 부부/국가 돌봄자 또는 시장 돌봄자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돌봄 부담은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 또는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식될 수 있지만, 하루 24시간에 대한 돌봄 부담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요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상 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주된 행동, 부차적인 행동, 수동적인 돌봄)에 따라 돌봄의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린아이를 둔 여성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녀의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녀의 요구(수유, 기저귀 갈기, 화장실 가기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여성은 설거지를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녀가 잘 놀고 있는지, 위험한 곳에 가지는 않는지를 지켜보는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행동(secondary childcare)’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³¹⁾. 또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조합이 아니며, 마음의 상태(Budig and Folbre, 2004)”이다. 즉, 직·간접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더라도 미취학아동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부모의 행위에 많은 제약을 준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혼자 놀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아이의 부름에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일을 하러 가거나 산책을 하는 등 외출을 할 수 없는 행위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제약의 정도를 2009년 『생활시간조사』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미취학아동과 함께한 시간’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미취학 아동과 함께 한 가사노동, 돌봄노동, 참여 및

31) 두 개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우선순위의 부여에 따라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나누어 기입하게 하는 방법은 2004년 『생활시간조사』부터 실시하였다.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소비한 시간을 모두 더하여 이를 선행연구의 명칭을 따라 ‘수동적 돌봄(passive care)’으로 지칭하였다(Folbre et al. 2005; Kalenkoski, Riber and Stratton, 2007). 여성의 돌봄노동을 이처럼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생기는 시간 소비에 있어서의 제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주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 변화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표 15>에서는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합한 시간 및 수동적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표 15>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돌봄 시간(분/하루)

	1999	2004		2009		
	주	주	주+동시	주	주+동시	수동
취업여성(A)	80	88	91	109	128	196
비취업여성(B)	172	191	197	207	239	321
비율(A/B)	0.47	0.46	0.46	0.53	0.54	0.61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여성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임(돌봄 정의에 따른 행위의 제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평일과 주말의 시간소비를 구분하지 않음).

*참조: 연도별 시간일지 수는 취업여성 (1999년, 2004년, 2009년 순으로) 2424, 1542, 862(개); 비취업여성 3918, 2434, 1386(개)

<표 15>에 따르면, 다른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는 행동을 포함한 주행동+동시행동 시간은 2004년에는 주행동에 비해 취업모 약 3분, 비취업모 약 6분이 증가하며, 2009년에는 취업모 약 19분, 비취업모 약 28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호주의 시간활용조사 상에서 조사된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 시간이 주행동 돌봄

시간의 3배 가까이 나타난 것(Ironmonger, 2004)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의 증가에 불과하다. 미국의 시간활용조사를 이용하여 주행동과 동시행동 시간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Zick and Bryant, 1996; Robinson and Godbey, 1997; Bianchi, 2000)에서도 호주의 분석 결과보다는 비율이 작지만, 동시행동이 주행동의 44-6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조사 질문을 만드는 방식(wording)에 의한 영향 및 조사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가에 따른 개인적 차이(Budig and Folbre, 2004)에서도 비롯될 수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우리나라의 여성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부여하는 중요도(현재은·권혁주, 2013)가 그만큼 크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취학아동과 함께한 모든 행동 시간을 합한 ‘수동적 돌봄’ 시간으로 돌봄 부담을 측정할 경우, 주행동이나 동시행동만을 고려했을 경우보다 부담의 정도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자료상에서 미취학아동과 함께한 시간으로 측정된 수동적 돌봄 시간은 취업모 약 196분, 비취업모 약 321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행동이나 동시행동으로 측정된 직·간접적인 미취학아동 돌봄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으로서, 주행동 및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까지 고려하면 미취학아동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 활용의 제약의 정도가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간접적 돌봄시간과 함께 수동적 돌봄시간을 광의의 돌봄 부담으로 본다면, 취업모는 하루 약 324분, 비취업모는 하루 약 560분을 아이를 돌보는 부담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루 1440분 중에 600분 내외가 수면 및 자기유지 시간으로 할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Hyun, Lee and Kum, 2012, p.185), 하루 가용한 840분 중에 324분, 560분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여가활동을 즐기면서도,

심지어 가족 중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에도 미취학아동을 신경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의 돌봄 정의에 따른 돌봄 부담 시간을 비취업모에 대한 취업모 돌봄 시간의 비율로 살펴보면, 취업여성은 수동적 돌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비취업모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취업모가 평일의 가사노동 시간과 순수한 의미의 여가 시간(수면 및 자기유지를 위한 필수적 시간을 제외한 여가활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돌봄시간을 증가시켜왔음을 보인 Hyun, Lee and Kum(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의 이중 부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각각 다른 정권 하의 보육정책에 대응해온 기혼여성의 전반적인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의 변화

1. 전반적인 시간 배분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내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돌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으며, 일-가족의 양립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반적인 시간 배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6>은 미취학아동 유무,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미취학 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분/하루)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아동 있음	아이돌봄	81	84	98	183	205	226
	총돌봄	113	120	137	232	256	289
	가사노동	167	147	136	271	268	255
	유급노동	379	400	394	9	2	1
	여가	765	758	752	906	896	875
N		1231	937	514	1937	1458	802
아동 없음	총돌봄	30	28	33	70	69	87
	가사노동	177	169	151	304	297	295
	유급노동	442	421	446	22	9	5
	여가	773	805	791	1008	1041	1027
N		3306	3303	1783	1942	1800	1066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을 경제활동참여 여부,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분석함.

*참조: N은 분석한 시간일지의 수를 의미함.

먼저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미취학아동 유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난 10년간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소한 가사노동시간만큼을 배분하는 방식은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간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을 포함한 총 돌봄시간이다. 여성의 총 돌봄시간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남편의 돌봄시간과 비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강한 가족 내 젠더 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남편의 돌봄시간이 지난 10년간 미미하게 증가해왔던 사실 및 돌봄시간이 많은 남성 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사실(<표 13>, <표 14> 참조)에 비추어볼 때,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지속

적인 돌봄시간 증가는 기존의 젠더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전 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 열의를 쏟는 요즘의 어머니들의 특성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의 증가 ‘경향’ 속에서 보육정책의 상대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가여부나, 증가폭을 비교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증가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간별 각 행동에 소비한 시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 18>에 따르면 전반적인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의 증가 경향 속에서도, 1999년과 2004년의 기간 사이의 미취학아동돌봄 시간 증가율이 가장 작은 것(0.05)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 돌봄 부담이 증가하긴 했지만 상대적인 증가율이 작았기 때문에, 유급노동 시간량의 절대적인 증가가 가능했던 것이다.

2004년에는 평일의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의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한 반면, 미취학아동이 없는 취업모의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의 측면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면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을 둔 모든 기혼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은 정권이나 정책이 변화한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 및 자기유지, 취미활동 등을 전보다 누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삶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은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모두 증가함). 경제발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노동시간의 증가, 여가시간의 감소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시간압박(time-pressure)을 증가시

킨다는 연구 결과(Robinson and Godbey, 1997; Gershuny, 2000; Jacobs and Gerson, 2001)를 고려하면,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은 단순히 취업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17> 미취학 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분/하루)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아동 있음	아이돌봄	79	94	125	161	170	180
	총돌봄	113	123	154	204	202	212
	가사노동	191	198	202	260	246	250
	유급노동	276	190	123	10	4	2
	여가	841	915	942	941	971	959
N		1193	605	348	1981	976	584
아동 없음	총돌봄	29	26	33	60	46	55
	가사노동	197	209	212	295	288	272
	유급노동	354	251	213	13	6	5
	여가	840	939	962	1041	1081	1089
N		3077	2039	1282	1993	1134	690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을 경제활동참여 여부,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분석함.

*참조: N은 분석한 시간일지의 수를 의미함.

<표 17>에 나타난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주말의 시간 증가를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의 아이돌봄 시간이 지난 10년간 46분 증가하여 약 1.6배 증가한 반면,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의 시간은 19분 증가하여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유급노동시간에 소비해야 하는 취업모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일정수준의 돌봄시간을 유지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Hyun, Lee and Kum, 2012)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는 전반적인 돌봄 시간의 증가 경향 속에서 평일의 여가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돌봄 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기간별 행동 시간 증가율

구분		평일				주말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99→04	04→09	99→04	04→09	99→04	04→09	99→04	04→09
아동 있음	아이돌봄	0.05	0.16	0.12	0.11	0.19	0.33	0.05	0.05
	총돌봄	0.06	0.14	0.10	0.13	0.09	0.25	-0.01	0.05
	총가사	-0.12	-0.07	-0.01	-0.05	0.04	0.02	-0.05	0.02
	총노동	0.06	-0.01	-0.75	-0.44	-0.31	-0.36	-0.62	-0.55
	총여가	-0.01	-0.01	-0.01	-0.02	0.09	0.03	0.03	-0.01
아동 없음	총돌봄	-0.08	0.21	-0.02	0.25	-0.12	0.30	-0.23	0.20
	총가사	-0.05	-0.11	-0.02	-0.01	0.06	0.02	-0.02	-0.06
	총노동	-0.05	0.06	-0.61	-0.44	-0.29	-0.15	-0.53	-0.26
	총여가	0.04	-0.02	0.03	-0.01	0.12	0.03	0.04	0.01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기혼여성의 평일과 주말 시간 배분을 경제활동참여 여부,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분석함.

*참조: 제시된 수치는 증가율로서, (해당연도 돌봄시간-전년도 돌봄시간/전년도 돌봄시간)으로 계산함.

이러한 취업모의 전략은 주당 근무시간의 축소, 시간 외 근무의 개선 등을 통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은 지난 10년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9년에도 여전히 약 123분의 유급노동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2009년 213분)과 비교할 때 약 58%에 불과한 수준으로,

미취학아동을 돌보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꺼려하는 기혼여성이 직장에
서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주말 유급노동시
간의 감소율은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여성
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감소율의 차이는 1999년-2004
년 기간(미취학아동 있는 기혼여성 -0.31: 미취학아동 없는 기혼여성
-0.29)보다 2004년-2009년의 기간(미취학아동 있는 기혼여성 -0.36: 미취
학아동 없는 기혼여성 -0.15)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8>참조).
이는 다시 한 번, 성별에 관계없는, 미취학아동 유무에 관계없는 유급노
동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표 19> 총노동 시간의 변화(분/하루)

	평일			주말		
연도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취업모(A)	659	667	667	579	511	479
비취업모(B)	512	525	545	475	452	464
B/A	0.78	0.79	0.82	0.82	0.88	0.97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기혼여성의
평일과 주말의 총노동 시간을 제시함.

*참조: 총노동 시간은 여성의 (총 유급노동시간+총 가사노동시간+총 돌봄노동시
간)으로 계산함.

2004년부터 2009년의 기간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는 미취학
아동을 둔 비취업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의 변화이다.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기간에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여성을 제외한 모든 기혼여성은
이전 기간(1999년-2004년)과 시간 배분의 변화 방향이 거의 동일했다.
미취학아동은 둔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만 미취학아동 돌봄 및 총돌봄 시
간이 증가하고,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시간압박(time-pressure)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

한 Bittman(2004)의 표를 원용한 <표 19>는 돌봄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무급노동시간에 유급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의 변화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취업모의 총노동 부담이 취업모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에 대한 비취업모의 총노동 시간 비율은 평일과 주말에 모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가정을 양립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육정책은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시켜주는 효과뿐 만 아니라, 비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비취업모의 총노동부담은 곧 무급노동으로 인한 부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비취업모의 가사와 육아로 인한 시간 압박의 정도가 취업모의 시간압박과 비슷한 정도라면, 이는 비취업모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의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시간 배분에 가져오는 차이를 살펴보고, 비취업모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으로서 ‘일반인의 학습’ 시간(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을 위해 소비된 시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 배분

<표 20>과 <표 21>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평일과 주말 시간 배분이 보육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 상에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과 2004년의 시간 배분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하다. 1999년에서 2004년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시간

배분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시간 배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이용자(B)에 대한 이용자(A)의 시간 비율(A/B)을 따로 제시하였다.

<표 20>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평일 시간 배분차이(분/하루)

구분		1999			2004		
보육서비스이용여부		이용(A)	비이용(B)	A/B	이용(A)	비이용(B)	A/B
취 업 모	아이돌봄	74	89	0.83	75	112	0.67
	총돌봄노동	102	127	0.80	110	150	0.73
	가사노동	154	184	0.84	138	171	0.81
	유급노동	407	343	1.19	423	332	1.27
	여가	762	768	0.99	753	771	0.98
	자기계발시간	4	3	1.42	4	3	1.25
N		694	537	-	701	236	-
비 취 업 모	아이돌봄	148	194	0.76	178	224	0.80
	총돌봄노동	202	242	0.83	232	273	0.85
	가사노동	275	270	1.02	267	268	1.00
	유급노동	8	9	0.92	2	3	0.69
	여가	926	900	1.03	920	878	1.05
	자기계발시간	16	4	4.59	24	3	8.63
N		487	1450	-	615	843	-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평일의 시간 배분을 제시함.

*참조: 각 행동에 대한 시간의 단위는 분/하루이며, 해당 여성의 모든 시간에 대한 평균시간으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따라서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나타내는 시간의 경우 같은 수치라 할지라도 상대적 수치(비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먼저 취업모의 평일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하여 조사시기와 상관없이, 미취학아동에 대한 평일 돌봄, 총 돌봄, 가사노동시간을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한 수준의 차이이긴 하지만 평일 여가시간 역시 더 적게 소비하는 한편,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확연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4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시간의 비율로 따지면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2004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평일 비이용자의 미취학아동 돌봄 시간, 총 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각 시간 비율이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급노동의 상대적 시간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에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줄어든 평일 돌봄 및 가사 등 무급노동에 대한 시간은 대부분 유급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며(여가시간에 대한 증가는 1999년 6분, 2004년에 18분에 불과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소비 시간의 상대적 비율의 증감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러한 경향은 1999년보다 2004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시간 비중의 차이는 비취업모에 있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평일 미취학아동 돌봄 및 총 돌봄 시간은 취업모와 마찬가지로 1999년과 2004년 모두 보육서비스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으나,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상대적 시간 비율은 1999년에 비하여 2004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시간의 경우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계발시간의 경우,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기계발시간은 『생활시간조사』 상에서 ‘일반인의 학습’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과 관련한 학습 및 취업과 관련된 학습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자기계발시간은 경제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직책으로의 승진 및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취업 및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평일 자기계발시간의 경우,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모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취업모가 더 크게 나타나,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조사시기와 상관없이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약 4분, 비이용자는 약 3분의 자기계발 시간만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1999년에 약 16분, 2004년에 약 24분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취업모는 이용하지 않는 비취업모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자기계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취업모 중 보육서비스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평일 자기계발시간의 비율³²⁾은 1999년에 4.59에서 2004년에 8.63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이용하는 비취업모가 이용하지 않는 비취업모에 비해 평일 자기계발 시간을 절대적·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점은 보육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자유시간의 증가가 비취업모의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32) 이러한 자기계발시간은 절대적 수치상으로는 전체 24시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상대적인 시간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루 시간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1>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주말 시간 배분차이(분/하루)

구분		1999			2004		
보육서비스이용여부		이용(A)	비이용(B)	A/B	이용(A)	비이용(B)	A/B
취 업 모	아이돌봄	76	83	0.92	88	112	0.78
	총돌봄노동	108	118	0.92	117	140	0.84
	가사노동	188	193	0.97	197	199	0.99
	유급노동	275	277	0.99	194	179	1.08
	여가	848	833	1.02	918	907	1.01
	자기계발시간	3	1	2.79	4	2	1.70
N		604	589		443	162	
비 취 업 모	아이돌봄	135	172	0.79	138	193	0.72
	총돌봄노동	181	213	0.85	174	222	0.78
	가사노동	267	258	1.03	249	245	1.02
	유급노동	12	9	1.27	2	5	0.53
	여가	952	936	1.02	996	953	1.05
	자기계발시간	6	4	1.65	7	2	3.13
N		549	1432		409	567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주말의 시간 배분을 제시함.

*참조: 각 행동에 대한 시간의 단위는 분/하루이며, 해당 여성의 모든 시간에 대한 평균시간으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따라서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나타내는 시간의 경우 같은 수치라 할지라도 상대적 수치(비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한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취업모의 주말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1999년과 2004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표 21>참조).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주말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과 총 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이 보육서비스 비이용자에 비해 항상 적게 나타나는 것은 평일의 취업모 시간 배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주말의 경우 평일과는 달리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여가시간이 비이용자의 여가시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놀라운 것은 1999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의 유급노동시간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의 유급노동시간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증진 보다는 양적 팽창에 주력했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주말 취업모의 시간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4년 주말의 경우, 평일의 시간 배분 결과와 유사하게 보육서비스 이용 취업모의 돌봄시간이 비이용 취업모의 돌봄시간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한편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상대적 시간 배분 또한 평일의 분석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주말 미취학아동 돌봄시간 및 총 돌봄시간의 비율은 1999년에 비하여 2004년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의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반면, 가사노동시간의 상대적 시간 비율은 2004년에 더 증가하였고,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주말의 유급노동시간 또한 2004년에 더 증가하여 주말에도 여성의 이중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을 통한 주말 돌봄시간의 감소는 가사노동과 여가, 자기계발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 배분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주말에는 1999년 주말에 비하여 보육서비스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과 총 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가시간과 자기계발시간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시간의 절대적 수치가 작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취업모의 자기계발시간의 절대적·상대적 증가가 주말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들의 자기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근로시간단축,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보육의 공공성 증진 및 질 개선 등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었던 참여 정부 시기의 변화 속에서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과 전략을 보여주었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는 평일의 여가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돌봄 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말에 부족했던 돌봄 및 가사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1999-2004년(전반기)과 2004-2009년(후반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의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돌봄노동(평일, 주말)의 상대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전반기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보육서비스 비이용 취업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 취업모의 돌봄 및 가사 노동 부담정도는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완화된 반면, 유급노동시간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주말에도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1999년에 비해 취업모의 돌봄시간의 (비이용 취업모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감소시키고 유급노동시간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의 양적팽창 시기였던 1999년의 경우 주말 보육서비스이용자의 유급노동시간은 비이용 유급노동시간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보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개인적, 가구적, 지역적 특성이 각각 다른 여성들의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에 대한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한 네 가지 시간 범주에 대한 SUR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조사대상 여성의 특성

이하에서는 1999년, 2004년, 2009년의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SUR 모형으로 분석을 하기에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12> 참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SUR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1,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분리한 모형2-1과 모형2-2에 대한 세 가지 분석에 대한 결과를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6개의 제시하였다. 모형은 미취학아동 여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기초통계량 역시 미취학아동 여부 및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22>), 전반적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은 1999년에는 35세 이전 연령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었던 반면, 2009년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증가하여 35-39세에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이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혼인연령 증가 및 출산연령 증가 경향에서 비롯된다. 반면, 미취학아동이 없는 기혼 여성의 연령대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35-49세 연령대에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명, %)

구분		1999		2004		2009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 동 있 음	20-24세	266	4.19	112	2.82	20	0.89
	25-29세	1936	30.53	776	19.52	427	18.99
	30-34세	2626	41.41	1934	48.64	879	39.1
	35-39세	1208	19.05	938	23.59	742	33.01
	40-44세	240	3.78	200	5.03	154	6.85
	45-49세	66	1.04	16	0.4	26	1.16
N		6342	100	3976	100	2248	100
아 동 없 음	20-24세	200	1.94	74	0.93	32	0.66
	25-29세	625	6.06	350	4.39	185	3.84
	30-34세	882	8.55	646	8.1	340	7.05
	35-39세	2844	27.56	1786	22.39	1076	22.32
	40-44세	3284	31.83	2702	33.88	1670	34.64
	45-49세	2483	24.06	2418	30.32	1518	31.49
N		10318	100	7976	100	4821	100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량 자료에서 20-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23>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학력 분포(명, %)

		1999		2004		2009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 동 있 음	대졸이상	1444	22.77	1574	39.59	1158	51.51
	고졸이상	4192	66.1	2242	56.39	1040	46.26
	중졸이상	532	8.39	120	3.02	34	1.51
	초졸이하	174	2.74	40	1.01	16	0.71
N		6342	100	3976	100	2248	100
아 동 없 음	대졸이상	1120	10.85	1558	19.53	1342	27.84
	고졸이상	4653	45.1	4290	53.79	2866	59.45
	중졸이상	2790	27.04	1400	17.55	446	9.25
	초졸이하	1755	17.01	728	9.13	167	3.46
N		10318	100	7976	100	4821	100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량 자료에서 20-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23>는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학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은 증가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항상 고학력인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며, 2009년에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의 경우 대졸이상 학력이 고졸학력 비중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표 24> 미취학아동 유무별, 경제활동 여부별 거주지역 특성(명, %)

구분			1999		2004		2009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 동 있 음	취 업 모	농가	210	8.66	90	5.84	20	2.32
		비농가	2214	91.34	1452	94.16	842	97.68
		서울,경기,인천	688	28.38	484	31.39	266	30.86
		그외 광역시	666	27.48	368	23.87	246	28.54
		광역시 외 지역	1070	44.14	690	44.75	350	40.6
	비 취 업 모	농가	116	2.96	42	1.73	29	2.09
		비농가	3802	97.04	2392	98.27	1357	97.91
		서울,경기,인천	1292	32.98	862	35.41	418	30.16
		그외 광역시	1172	29.91	740	30.4	404	29.15
		광역시 외 지역	1454	37.11	832	34.18	564	40.69
아 동 없 음	취 업 모	농가	975	15.27	518	10.27	146	4.76
		비농가	5408	84.73	4524	89.73	2919	95.24
		서울,경기,인천	1832	28.7	1550	30.74	948	30.93
		그외 광역시	1738	27.23	1430	28.36	946	30.86
		광역시 외 지역	2813	44.07	2062	40.9	1171	38.21
	비 취 업 모	농가	72	1.83	42	1.43	20	1.14
		비농가	3863	98.17	2892	98.57	1736	98.86
		서울,경기,인천	1240	31.51	1040	35.45	614	34.97
		그외 광역시	1256	31.92	1022	34.83	556	31.66
		광역시 외 지역	1439	36.57	872	29.72	586	33.37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량 자료에서 20-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미취학아동 유무별, 경제활동 여부별 기혼여성의 거주지역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표 24>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이 있는 취업모의 경우 비농가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9년에 감소한 반면, 그 외 광역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비취업모의 경우, 비농가 비중 및 수도권 거주 비중이 취업모에 비해 2004년까지 높았으나, 2009년에는 그 차이가 작아지는 반면 농가 비중 및 광역시 외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없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공통적으로 지난 10년간 비농가 거주 비중이 높아졌으며, 취업모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중이 소폭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에 감소하면서 광역시 외 지역의 거주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미취학아동 유무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별 가구규모(명, %)

구분			미취학아동 있음			미취학아동 없음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취 업 모	3세대 이상	빈도	339	220	78	386	271	146
		백분율	13.99	14.27	9.05	6.05	5.37	4.76
	2세대	빈도	2085	1322	784	5997	4771	2919
		백분율	86.10	85.73	90.95	93.95	94.63	95.24
미 취 업 모	3세대 이상	빈도	354	123	79	134	88	57
		백분율	9.04	5.05	5.7	3.41	3	3.25
	2세대	빈도	3564	2311	1307	3801	2846	1699
		백분율	90.96	94.95	94.3	96.59	97	96.75

*자료: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량 자료에서 20-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미취학아동 유무별, 경제활동 여부별 가족규모를 살펴보면 (<표 25>),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2세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의 경우

에 3세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났다. 2009년에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4년에는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 중 14%가 시부모 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 의해 부담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가구 내 다른 성인에게 부담되는 경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부재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2. SUR 분석 결과

1999년, 2004년, 2009년의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을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육시간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 속에서 2004년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의 돌봄시간의 상대적인 증가비율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유급노동시간은 절대적·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1)나이, 학력 등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농가/비농가 여부,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그 외 광역시, 광역시 외 지역)에 따른 지역적 특성, (3)미취학아동 여부, 3세대 가구여부, 가구 내 10세이상 가구원 수 등 가구 특성, (4)주택소유형태, 주거전용면적 등 경제활동참여여부, 직종,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관련 특성 등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 지역적, 가구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영향력 유무 및 영향의 방향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보육정책의 변화가 기혼여성의 시

간 배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표 26-1>과 <표 26-2>는 20-49세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평일과 주말의 미취학아동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에 대한 시간 배분을 SUR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표 12>의 모형1). <표 26-1>의 평일 1999년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경제활동 참여, (2)나이 및 학력, (3)비농가, (4)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경제수준, (5)미취학아동, 3세대 이상 가구와 같은 가구 특성이었다.

먼저 1999년에는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시간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는 미국 여성의 전반적 시간 배분을 분석한 Kimmel and Connelly(2006), Bianchi, Wight and Raley(2005)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학력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 여성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시간이 더 적었지만, 오히려 초졸 이하 여성의 경우 돌봄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경제활동 참여 및 미취학아동의 존재와 같이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표 26-1> 기혼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년, 2004년, 2009년)

	1999년				2004년				2009년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1073 ***	2033 ***	-14.1	1068 ***	1062 ***	1994 ***	0.1	10246 ***	98.2 ***	2116 ***	-28.9	10487 ***
경제활동참여	-335 ***	-1248 ***	4019 ***	-1958 ***	-412 ***	-1317 ***	4089 ***	-2015 ***	-400 ***	-1400 ***	4261 ***	-1983 ***
나이	-1.9 ***	1.5 ***	0.2	-0.7 **	-1.4 ***	1.8 ***	-0.1	0.3	-1.1 ***	1.9 ***	0.3	-0.5
(대졸기준)고졸이상	-4.8 **	10.1 ***	-9.8 *	0.8	-4.7 **	14.8 ***	-4.1	-7.5 *	-7.2 ***	12.2 ***	-0.4	-0.6
중졸이상	0.7	6.1	13.1 **	-7.4	4.1	11.7 **	11.5 **	-7.7	0.5	4.0	17.8 *	7.2
초졸이하	9.6 ***	-7.7	38.5 ***	-16.7 **	9.2 **	-1.9	0.5	12.9	-4.2	-6.5	32.6 **	9.6
(농가기준)비농가	-7.4 **	-276 ***	54.5 ***	-15.3 **	-118 ***	-357 ***	35.1 ***	18.4 **	-9.1	-48.2 ***	43.3 ***	14.6
(서울경기기준)광역시	-1.1	12.9 ***	-19.1 ***	8.3 **	-2.5	4.0	-7.0	-0.9	-1.2	3.5	-7.2	8.9
광역시 외 지역	-0.4	17.6 ***	-33.7 ***	15.8 ***	-1.9	0.5	-13.8 ***	16.3 ***	0.8	-1.6	-6.6	10.3 *
(자기집기준)전세	4.4 **	-8.7 ***	8.9 **	-0.8	2.0	-4.9	-1.4	6.8	2.3	-4.2	7.7	-4.5
월세	0.5	-16.6 ***	14.9 **	4.2	-2.7	1.6	-3.6	9.1	-11.4 ***	4.9	-12.0	20.2 **
무상주택	10.7 *	-20.0 **	1.6	8.6	4.5	10.8	-19.6 *	7.2	-1.0	18.0 *	-2.0	10.9
주거전용면적	0.0	0.0	-0.8 ***	0.5 **	-0.1	0.4 *	-0.8 ***	0.0	0.0	0.1	-0.5 **	0.1
미취학아동	1179 ***	7.5 **	-30.1 ***	-80.3 ***	1350 ***	3.6	-12.9 ***	-110.2 ***	153.5 ***	-0.6	-21.7 ***	-118.6 ***
3세대이상가구	6.4 *	-27.1 ***	35.5 ***	2.1	-9.9 **	-27.8 ***	27.9 ***	10.2	-4.9	-13.5 *	16.1	8.5
10세대이상 가구원수	-0.6	14.6 ***	5.1 ***	-17.0 ***	-1.5	12.2 ***	2.7	-12.2 ***	-3.0 **	11.1 ***	1.0	-15.1
Degree of Freedom	33600				28728				16596			
System Weighted R^2	0.4003				0.4242				0.4881			

*P<0.01; **P<0.05; ***P<0.001

교육이 여성의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높은 학력을 가진 여성일수록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Kimmel and Connelly(2006)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Bianchi, Wight and Raley(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고졸여성에 비해 고졸이하 여성은 더 적은 돌봄시간을, 대졸이상 여성은 더 많은 돌봄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1997년 시간조사를 이용한 Craig(2006)의 연구에서는 대졸 학위를 가진 여성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자녀와의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더 많은 돌봄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학력에 따른 돌봄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2004년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유지되다가 2009년에는 대졸이상 여성과 고졸여성 간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의 가장 저학력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여되던 돌봄 부담의 유의미성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고졸여성은 대졸이상 여성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적은 유급노동시간과 유의미하게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 및 초졸 여성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많은 유급노동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유급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많게 나타났던 Graig(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면서도,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고용 위치에 있는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직종에 있을수록 더 많이 일하고자 한다는 Fagan(2001)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저학력일수록 더 전문성이 적은 저소득의 열악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경향이 저학력일수록 더 많은 유급노동시간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 나타난 이러한 패턴은 2004년이 되면서 약해졌다가, 2009년에 다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한 대리변수로 사용한 지역변수로서, 1999년에는 농가에 비해 비농가 지역에 거주할수록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농가에 비해 농가 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Kimmel and Connolly(2006)의 연구에서도 도심지역(urban)이 비도심지역에 비해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Kimmel and Connolly(2006)의 연구에서 도심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돌봄노동 외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던 반면, 우리나라의 1999년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서는 비농가지역에 거주할수록, 더 많은 유급노동시간을 제공하고 더 적은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그 외 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돌봄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소도시로 갈수록 가사노동은 더 많이, 유급노동은 더 적게, 여가시간은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 소도시일수록,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더 적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주지역에 따른 시간 배분의 차이는 2003년에 조금씩 약해지면서(수도권에 대한 광역시의 유급노동, 여가시간 차이의 유의미성이 사라짐) 2009년에는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가와 비농가간 돌봄시간 및 여가시간 차이,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역의 유급노동 차이가 사라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한 보육예산은 현 정권이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보육서비스의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지역에 따른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수준과 관련된 변수로 이용한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전세에 살고 있는 여성 및 무상주택에 살고 있는 여성의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따라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돌봄 부담의 정도가 차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소유형태로 반영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은 증가하고 가사노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시간 배분의 차이 또한 2004년에는 대부분 사라졌으나(돌봄, 여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모두 사라짐), 2009년에는 자기 집 소유자와 월세 입주자간 돌봄시간, 여가시간의 차이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 평일에 3세대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2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오히려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3세대이상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동거하는 (시)부모 및 조부모의 존재가 돌봄 부담의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반면, (시)부모 및 조부모의 동거는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돌봄시간의 증가 경향과도 일치하는 측면으로, 여성이 다른 행동에 비해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반영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4년에는 (시)부모 및 조부모의 존재가 다른 시간에 대한 영향의 방향을 유지한 채, 여성의 돌봄 부담을 반대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2009년에는 돌봄노동에 대한 완화 효과 및 유급노동 시간의 증진 효과도 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3세대 가구가 점점 감소해왔으며, 이에 따라 3세대 가구의 성격 또한 변해온 데 기인한다. Hyun, Lee and Kum(2012)의 연구에 따르면, 3세대 가구 내 (시)부모의 돌봄시간은 1999년에서 2004년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취업 모 중 3세대 가구의 구성 비중이 2004년에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 급감한 것(<표 25>참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3세대 가구가 점점 사라졌듯이, 손주를 며느리(딸) 대신 돌봐주기 위한 조력자로 구성된 3세대 가구도 급격히 사라진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일의 시간 배분 분석결과와 유사성과 상이성이 동시에 나타났다(<표 26-2> 참조). 먼저 1999년 미취학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방향은 평일과 주말이 매우 흡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저학력 여성일수록 주말의 유급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과 2009년의 주말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간 외 근무(unsocial hours working) 시간이 더 취약한 직업적 위치(파트타임 여성 근로자)에 있을수록 증가한다는 Rubery, Smith and Fagan(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1999년에 지역에 비농가에 거주하는 여성은 농가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더 적은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mel and Connelly(2006)의 연구에서 도심지역 여성과 비도심지역 여성 간 차이가 주말의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과 다른 점이다(가사노동과 여가시간에는 같은 방향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옴). 1999년에 가사노동 시간

에 유의미한 차이를 거의 가져왔던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차이는 2004년에 사라졌지만, 대신 여가시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9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농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여가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삶의 질 측면에서 거주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전용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수준은 지난 10년간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자기 집 소유자에 비하여 월세 입주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유급노동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월세입주 여성은 평일 유급노동시간이 주택소유 여성에 비해 2004년, 2009년에 계속 유의미하게 많지 않았던 반면,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26-2> 기혼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년, 2004년, 2009년)

	1999년				2004년				2009년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111.0 ***	116.6 ***	-48.1 **	196.8 ***	87.8 ***	117.4 ***	-11.6 ***	212.9 ***	68.5 ***	128.9 ***	-9.6 ***	144.0 ***
경제활동참여	-3.24 ***	-1.50 ***	3.04 ***	-9.16 ***	-2.84 ***	-1.01 ***	2.14 ***	-7.09 ***	-1.86 ***	-8.46 ***	1.74 ***	-5.81 ***
나이	-2.0 ***	-0.8 **	0.6	1.6 ***	-1.3 ***	-1.6 ***	2.9 ***	0.5	-0.9 ***	-3.6 ***	2.7 ***	2.2 ***
(대졸기준)고졸이상	-5.4 **	-3.6 ***	2.2 ***	1.7 ***	-8.2 ***	-3.1 ***	3.5 ***	2.7	-3.0	-3.6 ***	5.3 ***	-7.8
중졸이상	-1.5	-4.7 ***	5.1 ***	10.0 **	0.9	-4.6 ***	7.4 ***	-14.5 **	5.0	-3.7 **	8.5 ***	-3.7 ***
초졸이하	6.9 *	-5.2 ***	7.2 ***	0.4	3.0	-4.9 ***	7.1 ***	-20.0 **	-4.5	-10.7	9.2 ***	-4.9 ***
(농가기준)비농가	-1.12 ***	18.9 **	2.9	-1.68 ***	-8.9 *	4.7 ***	-2.8 ***	-13.0	-6.5	4.7 ***	-3.6 *	7.6
(서울경기기준)광역시	-0.8	0.5	-5.5	6.9 **	-1.2	-1.4 ***	10.0	-1.0	1.5	-1.9 ***	10.6	4.9
광역시 외 지역	0.5	-2.2	-6.1	6.2 *	3.6	-1.3 ***	8.2	-0.9	1.3	-10.8	-3.0	6.5
(자기집기준)전세	11.4 ***	0.4	5.0	-1.23 ***	7.8 ***	-6.8	1.6 ***	-1.4 ***	6.3 **	-7.2	1.8	-2.4
월세	0.4	-2.4	3.1 ***	-2.3 ***	-0.9	-2.1 **	4.1 ***	-1.6 ***	10.6 **	-2.7 ***	2.9 ***	-1.1
무상주택	12.8 **	10.6	-8.9	-1.8 ***	0.5	10.8	5.0	-8.5	2.7	1.7	1.6	-2.4 *
주거전용면적	0.0	-0.5 *	0.2	0.2	-0.1	0.1	-0.4	0.5 **	-0.1	0.4	-0.3	-0.2
미취학아동	10.1 ***	-7.9 ***	-1.8 ***	2.4	12.0 ***	-1.0 ***	4.7	-4.5	14.0 ***	-1.2 ***	-6.1	7.7
3세대이상가구	5.8 *	-4.0	1.5 *	-9.6 *	0.2	-0.1	2.8 ***	-2.5 ***	2.8 ***	-1.9	4.4	-1.1
10세이상 가구원수	-0.4	-1.1 ***	3.7 *	9.5 ***	0.1	-1.3 ***	0.8	1.7 ***	-3.4 **	-1.0 ***	1.9	1.2 ***
Degree of Freedom	32912				18952				11552			
System Weighted R^2	0.2852				0.2731				0.2932			

*P<0.01; **P<0.05; ***P<0.001

2009년 주말에는 유의미하게 많은 유급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많은 돌봄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보육지원 정책의 시행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보육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심야, 주말 등)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부모가 일하러 간 동안 방치될 수 있는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보육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조사시기 별로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의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평일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시)부모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 내 10세 이상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지난 10년간 일관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09년에는 돌봄 시간의 유의미한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나이를 2-3세 기준으로 나누어 그룹별 더미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Kimmel and Connelly(2006)의 연구에서 10세-12세, 13-17세 자녀의 수, 그리고 Kalenkosky, Riber and Stratton(2007)의 연구에서 12-17세 자녀의 수가 주말의 돌봄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여주었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요약하자면,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 26-1>과 <표 26-2>의 분석 결과는 지난 10년간 지역에 따른 평일 가사노동과 유급노동 시간의 차이가 사라진 반면, 학력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의 차이, 경제수준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돌봄노동시간의 차이는 공통적으로 2004년에 잠시 완화되었다가 2009년에 다시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1999년과 2004년의 평일과 주말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모(모형2-1)와 비

취업모(모형2-2)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취업모에 대한 모형2-1의 결과는 <표 27-1>과 <표 27-2>에, 비취업모에 대한 모형2-2의 결과는 <표 28-1>과 <표 28-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한 모형(<표 27-1>, <표 27-2>)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임금 근로자, 사업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직종(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원/장치조립, 단순노무직)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의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및 임금에 관심을 기울여온 반면(Kimmel and Connolly, 2006; 윤자영, 2010), 종사상 지위나 직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rompton(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직종, 특히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근무시간의 선택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을 높여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형 2-1의 종사상 지위와 직종에 관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근무시간의 선택과 통제가능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평일의 시간 배분을 분석한 <표 27-1>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하여 근무시간의 제약이 가장 큰 임금근로자는 1999년 평일의 돌봄시간 및 가사노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난 반면, 유급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많게 나타났다. 2004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이어졌을 뿐 만 아니라, 여가시간에 대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서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그러한 경향이 다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1>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275.8 ***	219.9 ***	105.8 *	836.5 ***	406.1 ***	294.4 ***	-104.6 *	806.8 ***
(무급가족종사자기준)임금근로자	-42.5 ***	-33.3 ***	85.2 ***	1.4	-27.3 ***	-46.6 ***	110.9 ***	-29.2 **
고용원을 둔 사업주	-5.2	-47.3 **	20.0	24.1	-13.4	-43.6 ***	89.8 ***	-38.7
고용원 없는 자영자	-17.7 **	-19.4 **	10.4	26.8 **	-11.4	-7.6	25.3	-10.8
(단순노무직 기준)전문가	3.0	-41.5 ***	74.0 ***	-28.4	3.8	-76.0 ***	70.0 ***	9.2
사무직	5.9	-30.3 ***	25.8	4.4	-14.1	-67.6 ***	80.3 ***	0.9
서비스/판매직	5.7	-22.7 **	17.9	8.3	-5.2	-45.9 ***	34.5 *	5.4
농림어업	11.4	13.7	-45.8	11.8	-76.4 ***	-33.2	20.2	43.3
기능원장치조립	-4.0	-25.3 **	51.1 **	-15.1	-28.3 **	-67.4 ***	115.3 ***	-22.6
주당근로시간	-1.1 ***	-1.2 ***	4.5 ***	-1.7 ***	-1.1 ***	-1.6 ***	5.2 ***	-2.0 ***
나이	-4.5 ***	1.4 **	0.2	0.5	-3.8 ***	1.4 *	1.7	-0.7
(대졸이상기준)고졸이상	5.4	12.3	-12.0	-12.7	-6.0	15.8 **	-6.2	-16.1
중졸이상	-3.7	15.3	25.4	-29.4 *	-21.6	7.5	24.5	1.8
초졸이하	34.2 ***	-1.2	5.1	-38.6	-9.2	48.1	-126.8 **	78.5
(농가기준)비농가	17.8	-19.7	-24.3	6.3	-63.9 ***	-36.3 **	62.0 **	46.6 **
(서울경기기준)광역시	-4.1	10.7	-17.0	-0.8	-3.0	11.3	-29.9 **	14.2
광역시 외 지역	10.6 *	21.1 ***	-61.2 ***	16.6 *	-6.3	7.7	-31.0 **	30.1 ***
(자기집기준)전세	13.5 **	0.4	-5.9	2.4	6.6	2.0	-11.1	4.0
월세	11.8	-1.3	-11.8	-3.0	-9.1	-1.6	-1.2	14.6
무상주택	6.0	4.0	-40.0	33.6	26.3 *	24.0 *	-71.6 ***	30.6
주거전용면적	0.4	-0.6	-0.2	0.6	-0.9 **	0.0	0.6	0.1
보육서비스이용여부	-9.7 **	-19.3 ***	46.7 ***	-5.1	-30.0 ***	-18.2 ***	49.7 ***	-2.5
3세대이상가구	7.2	-39.0 ***	50.3 ***	-1.0	-21.7 **	-35.3 ***	50.6 ***	14.8
10세 이상 가구원 수	-2.2	10.8 ***	5.8	-8.4	-4.0	1.5	0.0	7.4
Degrees of freedom	4828				3652			
SW R-Square	0.1797				0.1915			

<표 27-2>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320.2 ***	137.0 ***	100.0	861.9 ***	267.7 ***	260.9 ***	23.9	874.7 ***
(무급가족종사자기준)임금근로자	-42.5 ***	-24.8 ***	26.7	31.9 **	3.4	12.3	-47.9 *	35.1
고용원을 둔 사업주	-54.2 ***	-24.0	-4.9	85.7 **	-2.4	-31.2	44.3	-9.6
고용원 없는 자영자	-11.3	-8.4	-38.0 *	40.2 **	18.2	34.7 **	-96.8 ***	38.7
(단순노무직 기준)전문가	-1.9	-12.1	-26.0	43.9 *	35.8 **	-11.3	-29.8	12.2
사무직	8.7	-33.8 ***	8.6	25.1	25.1 *	6.9	-102.3 ***	74.8 **
서비스/판매직	-8.1	-47.2 ***	72.9 ***	-6.6	8.9	-17.6	6.5	1.9
농림어업	-27.4	53.7 **	-38.2	18.5	-30.8	-66.1	14.8	59.5
기능원장치조립	-9.4	-35.4 ***	38.6	6.0	-6.4	16.9	-22.0	14.6
주당근로시간	-0.8 ***	-0.8 ***	3.9 ***	-1.9 ***	-0.9 ***	-1.0 ***	4.1 ***	-1.8 ***
나이	-4.8 ***	2.5 ***	0.9	-0.5	-2.6 ***	0.4	0.7	0.1
(대졸이상 기준)고졸이상	-20.9 ***	27.1 ***	-14.4	-3.1	-3.0	-10.9	29.9	-26.0
중졸이상	-17.9	26.5 *	-31.8	13.2	-16.5	-13.9	24.8	11.5
초졸이하	-2.2	1.7	10.9	13.8	-26.6	-4.0	4.8	42.5
(농가기준)비농가	-7.4	37.9 **	-60.5	30.7	-16.4	-62.7 **	-15.8	100.4 **
(서울경기기준)광역시	3.4	21.5 ***	-40.9 **	16.4	-4.1	-2.3	-26.4	17.3
광역시 외 지역	4.7	15.8 **	-41.8 ***	14.4	0.7	-1.2	-15.8	8.3
(자기집기준)전세	15.3 **	-10.8	-12.5	8.8	-6.2	-7.3	6.2	7.2
월세	-8.6	-24.6 **	29.0	0.2	-21.5 **	-0.7	30.1	-14.2
무상주택	28.2 **	-5.7	18.4	-35.9	-8.1	0.4	15.6	-3.1
주거전용면적	0.5	0.3	0.1	-0.8	-0.9	1.3 *	-1.5	0.6
보육서비스이용여부	-3.8	0.6	-4.2	9.1	-18.6 **	4.3	-9.1	21.1
(2세대가구기준)3세대이상가구	7.5	-14.1	5.7	-4.4	11.2	-35.6 **	-1.2	22.8
10세 이상 가구원 수	-5.7 *	-6.0	11.7	5.0	-6.8	2.6	33.4 **	-22.9 *
Degrees of freedom	4676				2324			
System Weighted R-Square	0.122				0.1247			

다음으로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반영된 직종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고위공무원, 관리자 및 전문가집단은 1999년과 2004년 모두 유의미하게 많은 유급노동을 제공하는 한편, 유의미하게 적은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같은 해에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등 다른 직업 종사자에 있어서도 나타났으며, 특히 사무직 여성의 경우 2004년에는 전문가 여성에 비해서도 더 많은 노동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근무시간의 선택 및 통제를 통해 더 많은 돌봄시간 및 가사시간을 제공한다는 Crompton(2001)의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의 주말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표 27-2>), 전문가 여성은 1999년 주말에 유의미하게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했으며, 2004년 주말에는 유의미하게 더 많은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여성 또한 2004년 주말에 유의미하게 많은 돌봄시간과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유의미하게 적은 유급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직업에서의 전문성은 평일 근무시간의 선택과 연결되지 않으며, 주말의 시간 외 근무만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있어서 부모 돌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평일 근로시간의 선택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나이 및 비농가/농가가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의 영향 및 주택소유형태와 주거전용면적으로 반영된 경제수준의 영향은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평일, 주말).

이는 여성이 이미 취업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의 차이와 경제적 차이를 상쇄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1999년과 2004년에 동일하게 평일의 돌봄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평일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업모는 미취학아동을 보육서비스에 맡김으로서 생기는 시간을 여가나 가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주말의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력(<표 27-2>)은 1999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4년에는 주말의 돌봄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21>에서 제시된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취업모의 주말 돌봄시간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똑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1999년 주말에는 취업모의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004년에는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참여정부 시기의 보육예산 증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의 질 개선 등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말에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실질적인 돌봄 부담 완화효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1999년에 평일 유급노동을 증가시키고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만을 누렸으나, 2004년에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평일 돌봄시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취업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업모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 내 (시)부모의 존재는 주말의 취업모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³⁴⁾.

가구 내 10세 이상 가구원의 수는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처럼 평일 돌봄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2009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다만, 1999년에 나타났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 효과가 2004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에는 주말의 돌봄 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2004년 주말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에 대한 모형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직업의 전문성은 평일의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말의 근무시간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은 학력 및 경제수준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켜 학력 및 경제수준에 따른 시간 배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취업모의 주말 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9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4년에는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 참여정부 시기의 적극적인 보육정책과 상당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비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2-2의 결과(<표 28-1>, <표 28-2>)는 취업모의 모형과는 달리 학력수준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일과 주말, 1999년과 2004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취업모는 다른 모든 학력 그룹에 비해 가장 많은 돌봄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력

34)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여성 가구에서 나타난 (시)부모의 가사 및 돌봄 지원 효과에 대하여, 2009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1(<표 26-1>, <표 26-2>)에서는 (시)부모의 가사 및 돌봄 부담 완화 효과가 2009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의 차이가 돌봄 시간에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했던 전체 여성에 대한 모형1의 분석결과나, Bianchi, Wight and Raley(2005)의 연구결과와 다른 점이다. 윤자영(2010)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저학력 여성과 달리 임금률 상승이 돌봄노동시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고학력 여성일수록 돌봄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는, 한편으로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을 중시하는 고학력 여성이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가족 비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더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지역적 차이, 경제수준의 차이는 평일 시간 배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던 반면, 자기 집을 소유한 비취업모에 비해 전세 입주 비취업모는 주말에 유의미하게 많은 돌봄시간을 1999년과 2004년에 지속적으로 소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평일과 주말, 1999년과 2004년에 공통적으로 비취업모의 돌봄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었으나, 구직활동을 포함한 유급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 20>과 <표 21>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취업모의 자기계발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시간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비취업모의 취업 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비취업모의 경우, 2세대 가구의 여성에 비해 오히려 평일과 주말의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흥미롭다(1999년,

2004년). 특히 1999년 평일의 가사노동 감소효과를 제외하면, 3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비취업모는 1999년 주말 여가시간만 유의미하게 감소할 뿐, 가사나 여가에 있어서 (시)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시)부모와의 동거는 돌봄 노동을 분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 (시)부모 ‘부양’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10세 이상 가구원 수는 1999년과 2004년 평일과 주말의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지만, 1999년 주말을 제외하면 돌봄시간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비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달리 학력수준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보육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1999년과 2004년에 공통적으로 평일과 주말의 비취업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28-1>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여성의 평일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433.5 ***	165.1 ***	-11.5	900.5 ***	489.6 ***	145.2 ***	4.1	876.3 ***
나이	-6.2 ***	1.8 ***	0.8 ***	0.0	-7.1 ***	2.0 ***	0.2	0.8
(대졸이상 기준)고졸이상	-27.5 ***	4.1	0.0	12.9	-25.4 ***	5.9	1.8 *	7.5
중졸이상	-22.5 *	1.2	6.6 *	13.7	-48.5 **	13.8	13.8 ***	26.2
초졸이하	-27.2	-27.2	-0.2	63.2 **	-25.2	-0.2	52.5 ***	-0.9
(농가기준)비농가	-4.0	-14.0	-5.3	10.9	8.4	6.7	-8.5 **	-15.0
(서울경기기준) 광역시	-7.7	9.8 *	5.3 **	-8.1	-12.3	4.8	0.4	0.5
광역시 외 지역	-9.8	13.4 **	5.1 **	-4.6	7.1	3.9	2.0 *	-9.7
(자기집기준)전세	7.7	-10.7 *	1.4	12.5	0.6	-2.6	-1.3	10.8
월세	6.7	-2.3	-3.4	7.6	-4.6	9.1	-2.4	-3.5
무상주택	33.6 **	-41.3 ***	-3.7	12.2	-10.3	13.1	-1.9	-8.9
주거전용면적	-0.1	0.1	0.0	0.0	0.1	0.6	-0.1	-0.9
보육서비스이용여부	-37.0 ***	3.1	-1.3	25.3 ***	-39.4 ***	-2.4	-1.0	42.3 ***
(2세대가구기준)3세대이상가구	40.6 ***	-22.4 **	8.1 **	-11.9	44.2 ***	-16.5	3.8	-23.5
10세 이상 가구원 수	-11.4 **	24.7 ***	-1.3	-9.1 *	-15.7 ***	13.9 ***	0.4	1.9
Degrees of freedom	7688				5772			
System Weighted R-Square	0.0568				0.0741			

*P<0.01; **P<0.05; ***P<0.001

<표 28-2>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여성의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노동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458.4 ***	130.2 ***	-22.8 **	901.7 ***	419.7 ***	194.1 ***	-2.2	832.0 ***
나이	-7.6 ***	3.3 ***	0.8 ***	1.1	-6.0 ***	1.1	0.4	3.0 **
(대졸이상 기준)고졸이상	-17.9 ***	26.9 ***	-0.6	-20.4 **	-24.5 ***	22.0 ***	2.3	-9.1
중졸이상	-34.0 ***	34.1 ***	0.4	-16.0	-56.9 **	9.9	3.1	30.7
초졸이하	-2.7	-6.0	33.2 ***	-35.9	13.8	9.0	2.7	-60.2
(농가기준)비농가	-19.7	-29.9 *	6.5	32.6	-11.8	-37.8	-7.6	53.3
(서울경기기준) 광역시	-6.0	5.0	3.0	0.5	-0.2	21.0 **	-2.6	-22.0 *
광역시 외 지역	8.2	-0.3	6.5 ***	-10.4	19.5 **	5.4	1.5	-22.7 *
(자기집기준)전세	22.3 ***	-12.7 **	-0.4	-7.4	28.9 ***	-9.9	3.3	-13.9
월세	6.5	-10.7	-5.0	6.8	21.6	-20.3 *	2.5	-6.5
무상주택	14.6	-27.6 **	-5.0	11.4	-6.4	-5.8	-2.8	24.5
주거전용면적	-1.3 ***	0.2	-0.1	0.5	-0.1	0.4	-0.1	-0.4
보육서비스이용여부	-27.8 ***	6.5	1.3	14.5 *	-46.8 ***	-0.2	-2.2	43.4 ***
(2세대가구기준)3세대이상가구	29.2 **	13.7	1.1	-43.5 ***	39.6 *	10.2	-2.3	-44.5
10세 이상 가구원 수	-4.0	15.0 ***	-0.2	-5.5	-12.5 *	13.9 **	1.1	1.9
Degrees of freedom	7864				3844			
System Weighted R-Square	0.0612				0.0562			

*P<0.01; **P<0.05; ***P<0.001

V.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를 일-가정의 양립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권별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보육예산 및 보육시설의 증가 속에서 참여정부(2003-2008년)는 근로시간단축, 보육의 공공성 및 질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다른 정권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혼여성 개인의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배분의 선택이 변화했을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각각 다른 정권에 위치한 1999년,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이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과 기혼여성의 시간 선택 간 관계에 대한 개연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돌봄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이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가구 내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이타주의적 선호를 가진 구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4시간 내의 제한된 시간 자원 내에서 결정되는 돌봄노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가구 내 젠더관계는 노동시장의 젠더관계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미

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1999년, 2004년, 2009년 평일과 주말에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은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기혼남성에 비해 확연히 적은 평일 유급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 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실시되었던 참여정부 시기(2004년)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200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시간 외 근무시간의 경우 성별,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내외로 존재하는 주말 근무시간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가구 내 기혼여성과 남편의 돌봄시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가구 내 젠더관계는 이인소득자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취업여성의 남편과 비취업여성의 남편 간 유의미한 돌봄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의 정도는 미취학아동의 돌봄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는 전반적인 돌봄 시간의 증가 경향 속에서 평일의 여가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은 미취학아동이 있는 취업모가 미취학아동이 없는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감소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유급노동시간의 단축이 특정 계층(여성,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 등)에게 집중되었을 때의 부작용(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Fagan, 2001; Gornick and Heron, 2006)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취업모에 있어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비이용자의 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시간 비율로 보았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돌봄시간 비율이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자기계발시간의 비율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기혼여성 및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가구적, 지역적, 정책적 특성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하는 SUR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1은 지난 10년간 지역에 따른 평일 가사노동과 유급노동 시간의 차이가 사라진 반면, 학력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유급노동시간 차이 및 경제수준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돌봄시간 차이는 공통적으로 2004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2-1의 결과는 1999년에는 주말의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2004년에는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참여정부 시기의 적극적인 보육정책과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2-2의 결과는 모형2-1과 달리 학력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여성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시간 사용 조사의 역사가 비교적 긴 서구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이들 연구들은 첫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속에서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또는 가구 변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변수들이 여성의 시간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Bianchi, Wight and Raley, 2005; Kimmel and Connelly, 2007; Kalenkosky, Riber and Stratton, 2007),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시간의 상충관계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Bianchi, 2000; Gauthier et al. 2004; Nock and Kingston, 1988), 셋째, 돌봄의 구별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돌봄에 대한 정의 방법에 관심을 갖는 연구(Bittman et al., 2004; Buding and Folbre, 2004; Folbre et al., 2005)들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간 조사는 불과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고, 관련 연구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손문금(2003)의 연구와 김진욱(2008)의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이중부담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성별 등의 변수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OLS 모형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의 돌봄노동이 여가나 가사노동과는 다른 구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을 다른 행동들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연구는 돌봄노동을 가사노동과 다를 바 없는 무급노동으로서 간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윤자영(2010)의 연구는 보육

서비스 가격과 임금률로 측정한 유급노동과 돌봄의 기회비용이 여성의 여가, 가사, 돌봄, 유급노동에 대한 전반적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SU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돌봄시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윤자영(2010)의 연구도 손문금(2003), 김진옥(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년도(1999년)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시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나는 여성의 돌봄노동의 구별적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의 측정방식 및 정의에 따른 돌봄 부담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동시행동으로서의 돌봄시간 및 수동적 돌봄시간을 측정하여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돌봄의 특성 및 미취학아동으로 인한 여성의 행동의 제약을 반영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상관없이 유급노동시간과 가사 및 돌봄시간을 모두 더한 총 노동시간의 측정을 통해 간과되기 쉬운 비취업모의 노동 부담을 고려하였다. 또한 자기계발시간의 측정을 통해 기존의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상태의 유지에 집중했던 보육정책의 대상 범위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여성의 돌봄시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분석하면서도, 여성의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 간의 유기적인 관계 및 가구 내 젠더관계와 노동시장 내 젠더관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간과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가구 내 기혼여성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을 비교하여 이러한 연관관계를 고려하였다. 이는 기존에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또는 돌봄노동시간 어느 하나의 시간에만 주목해왔던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시간 배분의 차이가 보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보육정책의 변화가 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 시간 연구가 가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성의 돌봄시간을 비롯한 시간 배분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보육정책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보육정책의 정권별 특성과 관련된 명시적인 변수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 편의를 제거하지 못하는 자료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의 관계는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 미국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유럽 국가들의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비교한 Gornick and Heron(2006)은 이들 집단 간 노동시간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육정책의 변화가 여성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둘 사이의 개연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충분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개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연구들에서 간과하였던 기술적 분석을 구체적인 문제의식 하에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이는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선행연구(Apps and Rees, 2005; Gornick and Heron, 2006; Won, 2012)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에 대한 선행연구(Bittman, 2004; Budig and Folbre, 2004; Folbre et al., 2005) 등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유급노동시간 또는 무급노동시간에 대해서만 OLS 분석을 시도했던 것(손문금, 2003; 김진옥, 2008)과

달리 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시간 범주 간 연관성을 고려한 SUR 분석을 통해 통계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가진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1999년, 2004년, 2009년 세 차례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가 정권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조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권별로 추진되었던 보육정책의 차이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존재하는 자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적 분석 및 SUR 분석의 결과는 근로시간단축, 보육의 공공성 및 질 강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장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한 참여정부 시기의 시간 배분이 가장 ‘일-가정 양립’에 유리하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인소득자 사회가 정착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구 내 젠더관계는 노동시장 내의 성평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남녀 간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내 젠더관계의 완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빠의 달” 제도는 남편에게 제공되던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시켜 가족 내 돌봄 분담을 유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30일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하게 되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의 “남성할당제”와 같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유인체계(홍승아·이인선, 2012)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성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남편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남편들에 비해 부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Duvander and Johansson, 2012; 홍승아·이인선, 2012).

한편 현재 “아빠의 달” 제도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자동육아휴직제”의 경우, 오히려 가구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전제함으로서 가구 내 젠더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고용주의 여성 근로자 기피 현상을 강화시키고 여성 근로자가 질 나쁜 직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³⁵⁾.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휴가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제공하는 가족권리의 형태나 캐나다(퀘벡주)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제공하는 “가족권리와 개별권리의 혼합형태”로 제공(홍승아·이인선, 2012)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동육아휴직제의 장점을 살려 출산 이후의 여성의 육아휴직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되, 그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여 가구 및 노동시장 내 젠더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가정과 시장 내의 젠더관계 개선을 위한 공통적인 정책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근로시간단축 및 파트타임 근로조건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Rubery, Smith and Fagan, 1998; Bosch, 1999;

35)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신문 1244호 “아빠도 육아휴직 가고 싶다” 기사(2013-06-26)의 여성단체연합 및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 센터장 인터뷰를 참조하였다(접속일 2013-07-04).

Sirianni and Negrey, 2000; Fagan, 2001; Won, 2012)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별 및 직종에 관계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직면한 가구 내 여성과 남성에게 보다 융통성있는 유연근무제의 사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일제 이외에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한 핀란드의 부모휴가제도는 각 배우자가 오전, 오후에 각각 휴가를 이용하여 자녀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승아·이인선, 2012). 이러한 시간제 방식의 부모휴가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사기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간제 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시간제 정규직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사한 전직원 및 경력 단절 주부를 대상으로 4시간 근무 조건(4대 보험 및 근무 연수 인정)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다³⁶⁾. 이러한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기존 사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도 유인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다.

보육서비스의 이용하는 취업모는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에 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 시간은 적은 반면(여가 및 가사에 대한 시간도 적음), 유급노동시간은 확연히 많았으며, 상대적 비율(이용자 시간/비이용자 시간)로 따지면 그러한 경향이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유급노동의 증

36) 시간제 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기사 “‘엄마는 4시간만 근무해’... SKT의 실험”(2013-6-10)을 참조하였다(접속일 2013-7-09).

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육정책이 일-가족 양립에 더욱 적극적일수록 그러한 효과가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자기계발시간을 증가시켜 취업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취업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되는 보육정책 상의 혜택(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전일제 아이돌보미 이용 등)을 취업과 관련 있는 자기계발활동(외국어, 자격증 및 학위 관련 학습 등)에 참여하는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한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4년에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평일 기혼여성 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감소한 것(<그림 3>참조), 1999년에는 유의미하지 않던 취업모의 주말 돌봄시간 완화 효과가 2004년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표 27-2>참조)과 같은 결과는 이 시기에 미취학아동으로 인한 제약이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다른 정권에 비하여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었던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조사시기의 시간 배분이 보육정책에만 영향받는 것은 아니며, 보육정책의 효과를 시간 자료를 통해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99년과 2004년, 2009년의 조사시기가 각각 다른 정권에 위치해 있고, 육아휴직, 근로시간정책 등 근무환경적 측면에서,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등 보육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적어도 보육정책의 변화와 시간 배분의 변화 간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시간 배분에 유의미한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정책은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 2-2의 결과는 모형2-1과 달리 학력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선행연구(Craig, 2006; 윤자영, 2010)의 결과를 고려할 때, 고학력 여성의 자발적인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다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줄이더라도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 어린이집의 증가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보육시설 장애 대한 국가의 감시 및 규제기능 강화, 시설 내 CCTV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미취학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보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돌봄노동의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3)의 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권별 보육정책의 변화가 이에 대응하는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정책과 여성의 시간 배분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을 제시해줄 수는 있으나,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 인과관계를 파악한다거나 보육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생활시간조사』는 조사 시기별로 새로 추가된 정보와 누락된 정보가 존재한다. 조사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는 1999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2009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부득이하게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전용면적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가처분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미취학아동 수에 관한 정보도 1999년과 2004년 자료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포함한 가구 당 총 미취학아동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아동 유무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모형의 목적이 연도별 시간 배분의 변화 및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통해 보육정책이 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찾는 데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도별 데이터를 각각 따로 분석한 본 연구의 모형은 연도별 데이터의 표본의 차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오차항의 분산이 가진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분석 대상을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이 더욱 주목해야할 대상집단인 취약계층 여성(미혼, 사별, 이혼여성)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외적타당성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1999년, 2004년, 2009년의 전체 데이터를 풀링하여 분석한 모형을 부록2-부록4에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에서는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되, 미혼, 사별, 이혼한 여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무엇보다도 시간 사용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본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본 연구는 개인이 사용한 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수치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러한 시간 사용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지, 평일의 돌봄시간이 감소하고 주말의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개인의 주관적 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질을 측정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에 개인의 주관적 시간과 삶의 질의 문제는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방법이 보다 개선된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상당 부분은 연구가 이용하고 있는 자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가 축적됨에 따라, 향후 연구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돌봄의 정의에 따른 돌봄 부담의 정도를 주행동으로서의 돌봄,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포함한 돌봄, 수동적 돌봄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시행동에 관한 정보

는 2004년부터, 수동적 돌봄에 관한 정보는 2009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돌봄 정의에 따른 돌봄 부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향후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가 공개된다면, 돌봄 정의에 따른 돌봄 부담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2009년부터는 보육서비스 관련 정보가 없는 대신 미취학아동수에 대한 정보가 조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녀 1인당 받게 되는 돌봄시간의 양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간자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시간 간의 상충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시간자료를 통해 자녀 입장에서 받게 되는 돌봄시간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N. and Mira, P.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 Apps, P. and Rees, R. (2005), "Gender, Time Use, and Public Policy Over the Life Cycl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3): 439-461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1997), "How Australians Use Their Time", Cat. No.4153.0, Canberra: ABS.
- Bergqvist, C. and Nyberg, A.(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In S. Mich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pp.287-308), New York: Routledge
- Bianchi, S.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401-414
- Bianchi, S., Wight, V. and Raley, S. (2005), Maternal Employment and Family Caregiving: Rethinking Time with Children in the ATUS, Paper prepared for the ATUS Early Results Conference, Bethesda, MD, December 9, 2005, Draft 12-01-05
- Bittman, M. (2004), Parenting and Employment: What Time-use Surveys Show,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152-170), New York: Routledge.

- Bittman, M. and Folbre, N.(2004), Introduction,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1-4), New York: Routledge.
- Bittman, M., Craig, L. and Folbre, N.(2004), Packaging Care: What Happens When Children Receive Nonparental Care?,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133-151), New York: Routledge.
- Bittman, M. and Wajcman, J.(2004),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171-193), New York: Routledge.
- Borchorst, A. (2002), Danish Child Care Policy, In S. Mich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pp.267-286), New York: Routledge.
- Bosch, G. (1999), "Working Time: Tendencies and Emerging Issu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8(2): 131-149
- Brennan, D. (2002), Australia: Child Care and State-Centered Feminism in a Liberal Welfare Regime, In S. Mich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pp.95-112), New York: Routledge.
- Bryant, W. K. and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227-237
- Budig, M. J. and Folbre, N. (2004), Activity, Proximity, or Responsibility,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51-68), New York: Routledge.

- Cancian, F., Kurz, D., London, A., Reviere, R. and Tuominen, M. (Eds.) (2002), *Child Care and Inequality: Rethinking Carework for Children and Youth*, Newyork: Routledge.
- Coase, R.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45
- Chatterji, P. and Markowitz, S. (2005), "Does the Length of Maternity Leave Affect Maternal Health?", *Southern Economic Journal*, 72(1): 16-41
- Craig, L. (2006), "Parental Education, Time in Paid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diary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4): 553-575
- Crompton, R.(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8(3): 266-291
- Davidson, R. and Mackinnon, J. (1993), *Estimation and Inference in Econometrics*, (2nd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vander, A-Z., & M. Johanson (2010). "What are the Effects of Reforms Promoting Fathers' Parental Leave Us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 319-330
- Esping-Andersen, G., Gallie, D., Hemerijk, A. and Myers, J.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gan, C. (2001), "Time, Money and the Gender Order: Work Orientations and Working-Time Preferences in Britai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8(3): 239-266
- Folbre, N. (2004), A theory of misallocation of time, In N. Folbre and

-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7-24), New York: Routledge.
- Folbre, N., Yoon, J., Finnoff, K. and Fuligni, A. S. (2005), "By What Measure? Family Time Devoted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42(2), pp. 373-390.
- Figart, D. M. and Mutari, E. (1998), "Degendering Work Time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ternative Policy Frameworks", *Review of Social Economy*, 56(4): 460-480
- Gauthier, A. H., Smeeding, T. M., Furstenberg, Jr., F. F.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time in children? Trends in selected industrialized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4): 647-671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Oxford.
- Gornick, J. C. and Heron, A. (2006), "The Regulation of Working Time a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Comparing Europ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8(2): 149-166
- Hallberg, D. and Klevmarken, A. (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 Heinen, J. (2002), Ideology, Economics and the Politics of Child Care in Poland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In S. Mich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pp.71-92), New York: Routledge

- Hyun, J. E., Lee, J. B., and Kum, H. (2012), "Time Allocation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uggling Time between Work and Care", *Korean Journal of Polity Studies*, 27(2): 175-201.
- Hofferth, S. L. (1999) "Family Reading to Young Children: Social Desirability and Cultural Biases in Reporting", Paper presented at Workshop on Measurement of and Research on Time Uses,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 Ironmonger, D. (2004), Bringing up Bobby and Betty: the Inputs and Outputs of Childcare Time,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93-109), New York: Routledge.
- Jacobs, J. A. and Gerson, K. (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Jensen, J. (2002), Against the Current: Child Care and Family Policy in Quebec, In S. Mich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pp.309-332), New York: Routledge.
- Kalenkoski, C. M., Ribar, D. C, and Stratton, L. S. (2007),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Parents Child Care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5(4): 353-384
- Kimmel, J and Connelly, R. (2007), Mothers' Time Choices in the United Stat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 Leslie, L. A., Anderson, E. A., and Branson, M. P. (1991),

- “Responsibility for Children, the Role of Gender an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pp.197–210.
- Morel, M.(2007), "From Subsidiarity to 'Ree Choice': Child- 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618–637
- Nock, S. L. and Kingston, P. W.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1): 59–85
- OECD(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2 (Austria, Ireland and Japan)*, Paris: OECD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OECD(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Paris: OECD
- Prentice, S. (2005), For-Profit Child Care: Past, Present and Future, Occasional Paper No. 21, Toronto: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University of Toronto.
- Robinson, J. and Godbey, G.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ubery, J. Smith, M, and Fagan, C. (1998), "National Working-Time Regimes and Equal Opportunities", *Feminist Economics*, 4(1): 71–101
- Sandberg, J. F. and Hofferth, S. L. (2001), "Changes in Children's

- Time with Parents: United States, 1981-1997", *Demography*, 38: 423-436
- Simon, H. A. (1992), "Altruism and Economics", *Eastern Economic Journal*, 18: 73-83
- Sirianni, C. and Negrey, C. (2000), "Working Time as Gendered Time", *Feminist Economics*, 6(1): 59-76
- Smeeding, T. M. and Marchand J. T. (2004), Family tim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pp. 25-48), New York: Routledge.
- Tanaka, S. (2005), "Paternal Leave and Child Health Across OECD Countries", *Economic Journal*, 115(501): 7-28
- Won, S. Y. (2012), "Gendered Working-Time Arrangemen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Korean Experiences", *Time & Society*, 21(3): 285-307
- Williams, J. (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ellner, A. (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298): 348-368
- Zick, C. D. and Bryand, W. K. (1996), "A New Look at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Primary and Secondary Time Use",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60-280

<http://kosis.go.kr>, 어린이집맞이용자통계,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e-나라지표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 58호, 보건복지부

권혁주(2007),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67-90.

김진욱(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김영순(2006), “블레이어정부 이후 영국 여성 사회권의 권리자격 변화: 보육지원제도를 통해 본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2): 171-191

대한상공회의소(2013),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 5.

백선희(2008),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토론회 자료집(pp. 1-30), KYC/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2001),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손문금(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청 통계연구 가을, 8(2): 23-58

송다영(2010), ‘자유선택’ 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8(30): 347-378

신영진(2011),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양옥승 외 11인 공저, (1999), 영유아 보육개론,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08 보육사업안내
-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자영(2010), 모의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3(2): 27-52.
- 이승미, 김선미(2011),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4): 51-65
- 이옥(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옥(2010), 한국 보육정책 성과와 대한 비판적 고찰, 아동학회지, 31(1): 197-216
-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연구보고서-3
-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연구보고서-2
- 장혜경, 김영란, 김필숙 (2008),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13
-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 46(1): 103-116.
- 최미옥(2012),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Futures Wheel 분석을 중심으로, 2012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pp. 665-683)
- 현재은, 권혁주(2013),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1): 269-293

홍승아, 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연구보고서-18

홍정화(20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법과 정책연구, 12(3): 1141-1175

부록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변화과정

시행연도 ³⁷⁾	내용	관련근거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	아동복지법
1981.4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	아동복지법
1982 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운영	유아교육진흥법
1987.12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1	탁아사업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1991.1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률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보육사업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종전 ‘탁아’ 기능에서 ‘보육’ 기능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5.5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확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 완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훈련기간 확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7.12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치원아의 무상보육 실시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1998.5	유아에 대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동안의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하는 유아로서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순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9.2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폐지·휴지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보육비용의 승인제 폐지(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영유아보육법
2004.1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환원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영아·장애아·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우선 보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규정 마련 	
20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도서·벽지 이외에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완화 	영유아보육법
20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보육의 우선제공 범위 확대·구체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2006.4	정원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보조 근거 마련 -영아 또는 장애아 이용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에 대한 지속적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인정 	영유아보육법
20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자체가 개발·정비·조성계획 수립시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공립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한 최초운영권 위탁 	영유아보육법
20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서비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되도록 명시 -취약보육대상에 다문화아동 포함 	영유아보육법
2009.7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하고, 가구의 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함.	
2011.1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 36개월 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6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 특례 부여	영유아보육법
2011.8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단체 등 보육시설을 신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당연 가입 의무	영유아보육법
2011.9	-무상보육 대상을 종전의 취학전 1년 유아, 소득 하위 70%유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의 모든 유아로 확대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영유아보육법
2011.1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3.1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2013.2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를 무상보육 대상으로 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자료: 관련 법률 및 법령

37) 법률의 경우 시행연도가 아닌 제·개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부록2.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평일,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2009년)

변수	평일				주말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273.8***	101.3***	-33.1**	914.5***	256.8***	69.7***	9.0	975.3***
경제활동참여	-103.3***	-116.1***	390.1***	-136.5***	-67.0***	-63.1***	222.4***	-72.5***
나이	-4.5***	2.5***	1.1***	1.2***	-4.9***	2.8***	2.2***	0.3
(대졸이상 기준)고졸이상	-18.1***	15.2***	-8.0**	2.0	-21.3***	15.7***	17.4***	-23.0***
중졸이상	-28.1***	15.6***	-10.2	-23.1***	-42.5***	10.1	2.2	-23.1**
초졸이하	-18.9**	5.4	-13.6	-16.8	-23.2**	-7.8	17.0	-22.8
(농가기준)비농가	-22.1***	-47.3***	66.8***	3.0	-18.0**	-32.6***	-7.0	53.5***
(서울경기기준) 광역시	-4.5	7.4**	-4.8	-2.0	-2.9	12.0***	-10.4**	-4.7
광역시 외 지역	-0.3	7.8***	-9.4***	4.8	6.3*	7.1**	-6.6	-7.6
(자기집기준)전세	7.2**	-1.4	-1.3	7.7**	17.3***	-10.9***	5.2	-6.5
월세	-0.4	2.5	-3.0	8.3	6.5	-15.0***	29.4***	-16.0**
무상주택	9.2	1.2	-18.4**	19.5**	11.2	-13.9**	3.4	0.2
주거전용면적	-0.1	0.1	-0.3	-0.3	-0.5**	0.0	-0.4	0.1
3세대이상가구	19.0***	-26.0***	29.5***	3.9	27.3***	-8.3*	15.6**	-24.0***
10세 이상 가구원 수	-9.9***	5.2***	5.9***	-5.3**	-10.3***	1.0	7.0***	0.4
(미혼,이혼,사별 기준)기혼	109.0***	109.3***	-62.1***	-35.1***	109.9***	116.5***	-67.8***	-79.4***
(1999년기준)2004년	16.6***	-7.6***	1.0	-10.5***	14.4***	-3.7	-39.4***	42.5***
2009년	41.3***	-21.0***	-3.1	-26.2***	34.0***	-1.3	-60.7***	38.2***
Degrees of freedom	30920				25784			
System Weighted R-Square	0.4				0.2			

부록3.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의 평일,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2004년)

변수	평일				주말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246.6***	168.2***	77.4**	912.7***	210.6***	90.2***	158.4***	943.3***
(무급가족종사자기준)임금근로자	-38.4***	-39.8***	95.5***	-8.2	-28.4***	-12.9*	4.7	35.8***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7*	-46.1***	73.0***	-8.9	-32.1***	-39.2**	44.7	31.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7.2***	-15.6**	16.0	16.6*	-3.8	4.9	-51.1***	38.2***
(단순노무직기준)전문가	3.2	-54.7***	61.5***	-2.7	10.1	-13.1	-33.3*	47.9***
사무직	-7.8	-49.5***	51.8***	9.7	7.3	-18.9**	-41.3**	63.8***
서비스/판매직	0.6	-35.3***	21.4*	15.7	-6.5	-33.9***	36.9**	14.4
농림어업	-13.0	5.8	-29.9	17.8	-20.5	30.6*	-65.3*	60.3**
기능원장치조립	-7.8	-39.4***	66.3***	-16.5	-5.4	-19.8*	-4.0	35.3**
주당근로시간	-1.1***	-1.3***	4.8***	-1.9***	-0.8***	-1.0***	4.3***	-2.0***
나이	-3.4***	2.0***	0.4	-0.6	-3.0***	2.4***	1.3	-1.6*
(대졸이상기준)고졸이상	-1.0	15.3***	-10.6	-13.6*	-11.4**	15.2**	3.7	-16.2
중졸이상	-3.2	22.3***	4.0	-16.6	-15.3*	11.2	-12.2	8.2
초졸이하	22.4**	-0.5	2.6	-28.9	-0.1	-3.0	26.1	-3.2
(농가기준)비농가	-12.5	-28.4***	15.6	19.2	-8.4	-7.8	-47.6*	56.8**
(서울경기기준)광역시	-2.3	9.8**	-17.2*	-1.1	3.0	15.7**	-30.4**	7.2
광역시 외 지역	1.3	11.1***	-43.0***	22.8***	6.1	14.9***	-34.2***	9.1
(자기집기준)전세	9.7**	1.8	-8.7	2.6	8.1*	-7.0	-11.0	8.4
월세	4.3	1.4	-5.1	-1.3	-7.7	-13.0*	20.4	-6.5
무상주택	17.1**	14.4	-55.4***	29.1**	28.4***	-5.0	6.4	-22.9
주거전용면적	-0.1	-0.3	0.8	-0.3	-0.1	0.4	-0.4	-0.3
보육서비스이용여부	-13.3***	-15.3***	39.6***	-5.0	-6.9*	2.8	1.5	2.9
3세대이상가구	0.0	-28.8***	30.6***	10.3	10.9*	-14.8**	8.5	-7.4
10세 이상 가구원수	-5.2***	2.0	6.2	0.0	-9.0***	-4.2	10.8**	4.1
(미혼,이혼,사별 기준) 기혼	49.0***	68.7***	-56.5***	-52.9***	56.8***	87.8***	-66.8***	-67.0***
(1999년기준)2004년	11.3***	-5.1	4.1	-12.7**	16.7***	8.6	-77.8***	63.6***
Degrees of freedom	9944				8512			
System Weighted R-Square	0.2				0.1			

부록4.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의 평일, 주말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9-2004년)

	평일				주말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돌봄	가사	유급노동	여가
Intercept	251.1***	14.8	-9.8*	855.7***	270.3***	0.7	-13.1*	965.1***
나이	-5.5***	2.6***	0.5***	3.0***	-6.2***	2.8***	0.9***	2.7***
(대졸이상기준)고졸이상	-24.9***	4.1	1.1	12.9**	-26.0***	25.8***	1.9	-14.2**
중졸이상	-37.2***	-1.8	8.4***	-27.3**	-54.8***	21.9**	2.3	-28.3**
초졸이하	-35.9**	-8.5	9.6***	2.7	-25.3*	-5.9	17.5***	-28.3
(농가기준)비농가	-11.3	-7.3	-5.8*	18.7	-27.4**	-22.5*	1.9	39.8**
(서울경기기준)광역시	-6.0	7.3*	2.8**	-6.6	-6.2	10.9**	0.0	-7.9
광역시 외 지역	-0.7	9.5**	3.2***	-2.7	11.6**	3.3	2.7	-14.4**
(자기집기준)전세	3.7	-4.8	-0.2	17.5***	21.5***	-12.6***	0.2	-0.9
월세	0.6	-0.7	-3.2*	18.7**	13.6*	-15.9**	-2.0	12.1
무상주택	7.2	-12.8	-2.5	7.5	2.1	-10.9	-4.2	12.9
주거전용면적	-0.3	0.4	-0.1	-1.0**	-1.0***	0.1	-0.1	-0.1
보육서비스이용여부	-39.3***	-1.0	-1.8	28.9***	-36.5***	1.2	0.9	21.5***
3세대이상가구	41.0***	-24.2***	4.4**	11.0	28.9***	7.6	-0.9	-23.7**
10세 이상 가구원 수	-10.1***	12.6***	-0.1	-7.5**	-7.7***	8.9***	0.6	-1.5
(미혼,이혼,사별 기준)기혼	169.3***	141.0***	6.1*	-43.6***	166.0***	152.0***	-7.7*	-124.5***
(1999년기준)2004년	28.8***	-6.1*	-5.3***	-15.1***	20.4***	-10.2**	-5.9***	16.8***
Degrees of freedom	15184				13236			
System Weighted R-Square	0.2				0.1			

Abstract

The analysis on change of childcare policy and female time allocation

Jae Eun Hyun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change of the choice around time alloc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childcare policy. Childcare policy aiming work-family compatibility has been more important in developed countries under the recognition on the positive effects of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Social policy investing on women and children has been much developed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as well.

The Korean Time Use Survey of 1999, 2004, 2009 on different governments presents the probability of correlation between childcare policy and individual time allocation by examining female time allocation depending on preschool children and economic participation. Since 1990s, the three different government by President Kim, Rho,

and Lee has gradu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and facilities. Among them, Rho Government(2003–2008) had driven forward the most active social policy such as reduction of working time, substantial public investment in childcare service and quality improvement of day-care facilities and programs.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during this period, working mothers has offered significantly less paidwork time in weekdays than working father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reschool children which implies the necessity of political effort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e gap in paidwork time between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without preschool children decreased in 2004(the period of Rho Government) when push forward active childcare policy but increased again in 2009(the period of Lee Government) when implimented marketisatided and re-familised childcare policy. Paidwork time on weekends has decreased for last 10 years regardless of gender and preschool children, however, still existed from 2 to 4 hours a day.

In spite of switching to dual earner model, gender relation in household still strongly exists in Korea. Husbands of working mothers have not spent significantly more childcare time than those of non-working mothers which means a serious dual burden of working mothers.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have increased childcare time and paidwork time while decreasing time spent on leisure and housework in weekdays. They have compensated for insufficient care time during the week by increasing time devoted

to their children on weekends. Working mothers who have preschool children have spent less paidwork time on weekends than those who have not. Considering the significant side effects when the working time policy implies gendered role of women in households(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Fagan, 2001; Gornick and Heron, 2006), such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preschool children do not seem to be a desirable change.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ho use childcare service have spent less childcare time and housework time in weekdays while spent more paidwork time both in weekdays and on weekends. Such pattern of time allocation appeared more strongly in 2004 than in 1999 when comparing relative childcare time ratio of care service users to non-users. In contrast, for non-working mothers, the relative childcare time ratio of service users to non-users has even increased for the same period. Self-improvement time having an effect on employment and reemployment of mothers appeared to more in non-working mothers who are using childcare service than in those who are not in weekdays and on weekends.

As a result of SUR models on married women(Model 1) and working(Model 2-1) and non-working(Model 2-2)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time allocation affected by the change of childcare policy is found. The result of the Model 1 on married women suggests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housework time and paidwork time depending on region in weekdays has disappeared for last 10 years while the effect of education on

paidwork time and the effect of economic status on childcare time have decreased in 2004 and increased again in 2009.

The result of the Model 2-1 on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mplies the possibility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ctive childcare policy of Rho Government and individual choice of time allocation. The use of childcare service have a significant decreasing effect on childcare time of weekends in 2004 while did not in 1999. The result of the Model 2-2 that more educated non-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spend more childcare time presents the possibility of voluntary unemployment of highly-educated mothers.

The overall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s several poli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being out of the legal issues, the improvement of the gendered relation in households has to be fully considered when the social policies or welfare regimes are implemented in the respect that the gender equity in households is linked closely with the gender equality in labor market. Therefor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has to have an intention of actual improvement of gender division of care burden.

Second, reduction of working time, increase of working time flexibility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status would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improving gender order both in the households and the labor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implement more practical and detailed childcare policy such as parental leave divided non-transferably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nd 'part-time' working regular workers which has been

recently tried out in several private companies.

Third, the quality of childcare facilities and services must have the highest political priority to prevent highly educated female workforce from voluntarily getting out of labor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increas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workplace nursery centers, enhance the flexibility of using time and install CCTVs in childcare facilities. Practical benefits and incentives for non-working mothers trying to get a job have to be intensified and various programs for self-improvement have to be developed at government level which can be linked with employment and reemployment of mothers.

Though the time use data have no information on childcare policy itself, this study tries to give political implications for practical childcare policy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by analysing the possibility of association between childcare policy and individual time allocation. It is not possible to infer the effect of childcare policy from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study. This study, however,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suggesting on what aspects the childcare policy should be more focused on basis of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importance of childcare policy and distinctive features of care time.

Keywords: childcare policy, women, economic participation, time allocation, care

Student number: 2008-30665